2011여성노동상담원교육

여성노동교육, 시원하게 다이빙하라!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 21일(목)

장소 | 시민공간 나루B1 원경선배움나루

주최·주관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www.womenlink.or.kr 상담| 02.706.5050 이메일 상담|eq5050@womenlink.or.kr

여성노동교육, 시원하게 다이빙하라!

교·육·일·정

7월 20일(목)

시간	교육 내용	강사
10:00~12:00	1강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자!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2:00~13:00	**점심식사**	
1:00~15:00	2강 여성노동, 시간을 묻다!	**국미애**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15:15~17:15	3강 여성노동, 돌봄에서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이숙진** (대구가톨릭대 연구교수)

7월 21일(금)

시간	교육 내용	강사
10:00~12:00	4강 여성노동, 감정을 말하다!	**권수현**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5강 여성노동, 쟁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그린다!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5:15~17:15	6강 여성노동, 희.勞.애.락 워크샵	**강의참가자**

자·료·집·순·서

1 • **[1강]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자!**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8 • **[2강] 여성노동, 시간을 묻다!**
국미애(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31 • **[3강] 여성노동, 돌봄에서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이숙진(대구가톨릭대 연구교수)

62 • **[4강] 여성노동, 감정을 말하다!**
권수현(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76 • **[5강] 여성노동, 쟁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그린다!**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77 • **[6강] 여성노동, 희.勞.애.락 워크샵**
강의참가자 모두

1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의 삶

김현미hmkim2@yonsei.ac.kr|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 문제제기

최근 30년간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던 신자유주의는 시장주도의 정치 경제적 질서를 만들며 모든 인간을 '노동자'나 '생활인'의 위치에서 '소비자'나 '투자자'의 위치로 바꿔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생존과 좋은 삶을 위협하는 실업, 빈곤, 각종 위험에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포기하거나 시장에 맡김으로써 '사회'의 의미를 삭제해 버리는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이다. 다양한 국가들이 다양한 버전의 신자유주의적 기획을 채택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적 질서에 담긴 세계관이 신자유주의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즉, 이익이 있는 부분에만 투자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전 사회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공동적 삶'이나 '비시장적 가치'를 약화시키고 자본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고자 각종 규제를 철폐하며 노동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는 신자유주의라는 초국적 자산가의 이해, 군사주의, 기독교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 보수주의와의 결합을 통해 실현되었다. 놀랍게도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권력의 연합'을 직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정치는 "개인주의, 선택, 시장사회, 자유방임,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정부개입"과 "비경제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정부, 사회적 권위주의, 훈육된 사회, 위계와 복종, 민족의 예찬"등의 요소들을 조합하여 도출된다.[1] 국가 기능의 많은 부분이 민영화를 통해 기업으로

이전되어 국민의 대다수를 소비자로 변화시킨 상황에서 국가의 정당성과 통치성은 '안보'에 대한 강조나 글로벌 스탠딩과 책무 등 사회적 퍼포먼스와 같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국가가 시장에 많은 것을 양도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기 정당성과 권위를 확보하는 방법은 국가가 가진 문화적 이데올로기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이 가진 경제적 불안이나 사회적 지위 하락에 대한 공포 등의 상태에 있는 국민들의 삶에 장기적인 안목과 기획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이들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자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바우먼은 신자유주의 기획 하에서 안전과 안보의 개념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국가가 복지 정책에서 후퇴할수록 안전과 안보에 대한 문화적 논리는 강화된다.

본 발표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가 전지구적 경제 질서로 잡는데는 신자유주의가 유포한 '문화적 규범'이 동의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국가의 '사회적' 기능은 후퇴하고 문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민주주의의 기획을 위해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 진영이 재정치화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신자유주의가 여성을 위계화하고 전통적 젠더 불평등을 삭제해오는 방식은 무엇인가? 본 발표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여성

1)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여성 삶의 질: 신자유주의는 흔히 공공 부문의 민영화, 시장 개방, 기업과 시장에 대한 탈규제, 사회 복지 정책의 축소, 금융화 등으로 설명된다. 1980년대 말 동구권 사회주의의 후퇴로 전 세계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개혁이라는 하나의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전면적 구조 조정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강제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는 유례없는 빈부격차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체, 금융시장 행위자, 정부가 자본 축적이라는 하나의 이해관계로 묶이면서 하나의 일련의 표준적 진실을 만들

1) 수비르 신하, "신자유주의와 시민사회: 기획과 가능성들" 알프레드 사드-필류 데버러 존스틴 편저, 김덕민 옮김, 『네오리버럴리즘』 그린비, 2009, 286에서 재인용.

어 놓고 있다. '표준적 진실'의 하나는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일단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임금, 근로조건, 각종 수당, 휴가, 고용과 해고에 관한 정당한 절차, 의료보험과 사회보장 등의 각종 혜택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수잔 조지 2008:25).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의 여성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어 왔다. 첫째,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변화에 따른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여성이 비공식 부분이나 저임금노동에 집중됨으로써 빈곤화가 심해지고 있다. 여성의 고용 불안정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유지하며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둘째로, 정부의 사회 서비스 비용의 지출을 줄임에 따라 여성들이 재생산이나 돌봄 노동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남편 등 가족 구성원의 실직과 연금 부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돌봄이나 재생산 노동의 부담이 줄어들지 않음으로써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을 하고 쉬지 못하는 노동중독의 상황에 놓이게 되어 삶의 질 또한 낮아지고 있다. 자원이 있는 중산층 여성은 시장을 통해 재생산/돌봄 노동을 구매하지만 전반적인 중산층의 위기는 갑작스런 계층 하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가족의 실직과 연금 부재를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존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가족주의'가 등장하고 있다.[2] 감정이 귀한 상품이 되는 현재 상황에서 요즘 한국의 중산층 노인들에게 "딸, 특히 결혼 안한 돈 많이 못 버는 딸이 좋아" 와 같은 담론이 노골화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 비혼딸이야말로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어렵고, 적당히 먹여 살리면서 늙고 병 들었을때 부모가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셋째로, 가족부양을 위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실업 증가에 따른 가족구성원의 실직, 물가상승, 교육비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가계소득을 만회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많아진다. 그러나 경제적 참여를 통한 지위의 상승이나 발언권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이순주,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 서울: 오름, 2005.

2) "mixed blessing"과 개인화: 신자유주의는 여성 운동이나 여성 권리 향상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력'만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 개혁과 여성(또는 남성)과의 관계는 "mixed blessing"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배제와 포섭을 만들어나간다. 즉 새로운 영역들에 권위, 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전통적인 영역'은 약화시켜나간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강조된 '인적자원개발론'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줄 '인적담론'의 이미지에 들어맞으면 '젠더'를 초월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제중심주의, 경쟁중심주의가 문화적 관습과 전통의 규제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개혁은 '능력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이고 집단화된 구속이나 범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에게 새로운 교육적, 전문적, 재정적 기회들을 열어준다. 이런 점에서 여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성별 불평등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전통과 집단적 피해자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을 '루저'로 배제되는 자와 같은 부류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다. 자신의 정치적, 문화적 행위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능력주의'가 강조한 '개별성'과 '변별적 역량'을 강조해야 한다. 능력을 통한 주류 사회의 진출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여성들의 경쟁력과 경쟁심 또한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집단적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운동에 대한 반감이 증대된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능력이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차별은 이제 종식되었다고 선언되기도 한다. 여성들도 자신들이 '해방'되었고, 남성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성운동이나 페미니즘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피해자'화 한다는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진다.

3. 자본주의의 '재생산적 전환'과 소비 '경험' 주체의 전면화

자본의 재생산적 전환은 서구를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 발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전환, 즉, 상품을 생산하던 생산영역에서 일상생활의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재생산영역으로 자본이 확장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재생산의 노동과정화는 일상생활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통제되어 생산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기존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의미한다. 기존에 인간

의 자발적 노동으로 구현되던 돌봄, 친밀성, 교육, 먹거리 제공 등의 영역이 '시장의 상품'으로 만들어지면서 전 일상 영역의 '소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자본의 재생산적 전환은 국가가 공공 영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개별화된 소비를 통해 비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영역을 상품으로 구매하는데서 비롯된다. 공통적으로 제 1세계나 아시아의 경제부국에서는 기존에 육아나 보육, 교육, 노인 돌보기 등에 쓰이던 공공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했고, 기업도 직원에게 베풀던 각종 특별 수당을 줄여 나갔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가 힘을 쓰지 않는 생활 세계의 문제들, 즉, 먹거리, 건강, 안전, 환경 등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적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적자생존과 승자독식 사회에서 점점 더 불투명해지는 자녀들의 계층 상승을 위해 자녀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 중산층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좋은 학군과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 소비 지출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소비 지출이 급증하여 여성, 남성 모두 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돌봄'이 공동화된다. 즉 기존에 핵가족이 수행했던 돌봄이나 '보호'의 역할이 침식되었고, 국가가 관장해야 할 돌봄의 사회화나 공동화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이러한 제 1세계나 아시아의 중산층 가족은 '가족의 위기'와 '돌봄 노동의 공동화'를 메우기 위해 임금이 저렴한 다른 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야 했다(Ehrenreich & Hochschild, 2002; Hochschild 2003; Parrenas 2001). 즉, 돌봄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가족 구성과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이주인력'으로 동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의 도시 지역에는 가정부, 환자돌봄이, 보모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주하는 여성들로 넘쳐난다. 돌봄 노동에 들이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제 1 세계와 아시아의 중산층 가족은 더욱 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미등록' 이주자를 선호하며 이들의 노동권 보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진다.

전 시민의 빠른 소비자화는 정치 또한 소비와의 연관성을 통해 실현되게 만든다. 게르하르트 슐체는 '체험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후기 근대의 개인들이 체험지향적 생활양식을 통해 '아름답고, 재미있고, 주관적으로 보람있다고 느껴지는 삶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3] 체험지향적이니 사회에서는 소비자 정체성을 가진 개

인들에게 모든 것을 체험가능한 영역이나 장소로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성 또한 증대된다. 체험 서비스를 받을 준비가 된 여성들 또한 체험적 소비의 방식으로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여 보람된 삶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정치는 구조적인 억압에 대한 공동적인 대응보다는 개별화된 소비-시민 주체의 발현을 통한 실현으로 의미화된다.

4. 토론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가 전면화되며 정치적 현장은 맹목적이고 무자비한 우파적 공세들로 가득 차고,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선거'를 통한 정국 전환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신자유주의하의 구조 개혁 속에서 집단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여성들은 왜 공동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개별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자 하는가이다. 돈에 대한 거리낌 없는 욕망이 공공연히 표출되고 여성이 자신을 '투자자'나 '소비자'로 인식하며 재테크의 기술을 학습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에서[4] 즉각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회 운동의 비전을 갖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IMF 이후 복지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개인들 스스로가 메워야 하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개인은 불예측적인 미래를 위해 금융 소비자로 편입되면서 개별적 생존 전략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나쁜 가버넌스'임이 입증된 현재 삶의 불안정성과 피폐함과 싸우기 위해 위계화되고 범주화된 인간의 삶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새로운 기획에 여성주의는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가? 모든 개인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상력을 갖는 것은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정치적 상상력을 구상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넷의 지적처럼 "생존 가능한 삶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정치적 행위[5]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3) 유베 쉬만크, 우테 폴크만 지음, 김기범 외 옮김,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서울: 논형, 2011.
4) 박성일, "일상을 잠식한 금융자본주의"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5) 주디스 버틀러 『불확실한 삶』, 양효실 옮김, 경성대출판부 2008.

새로운 기획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시장이 사람들의 삶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치 전환을 위한 탐색이 필요한 시대이다.[6] 1980년대 멕시코의 여성운동이 실질적인 이해에 관한 이슈들, 즉, 공공서비스-전기, 하수도, 식품-와 임금과 신용 획득 등의 노력으로 이어져 대중적 참여를 가능하게 했던 예[7] 들 또한 상기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분배의 위기, 자신을 철저한 '물질성'의 현존체로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는 '대중', 싸이월드의 일촌/방문객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매체들의 팔로어(follower)에 의해 고무되는 나르시즘적인 방식의 정치적 연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애착의 대상은 더 이상 사회적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 자본주의의 현란하고 화려한 기술성에 우리의 삶은 이미 깊이 연루되어 있고, 새로운 테크널로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의 언어는 첨단적이지 못해 청취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시대이다. 그러나 수질오염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수를 사먹는 것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신자유주의 정치학은 공공 영역을 시장 영역으로 변형시키고 공공재의 획득을 '구매력'으로 교환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치를 일상화시키고 있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정치성'은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6) 김현미, 권수현,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상상하며,"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7) 이순주,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여성정책과 여성운동-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위의 책.

2

여성노동, 시간을 묻다!
-『시간을 묻다: 노동사회와 젠더』를 중심으로-8)

국미애 |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

1. 여성노동, 왜 시간을 물어야 하는가

그대, 바쁜가요?
왜,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아니면, 왜 바쁘지 않은가요?
바쁜, 혹은 바쁘지 않은 자신을 설명해보세요.
그대는 누구인가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시간이 돈이다"이라는 표현이 단적으로 보여주듯, 계량화를 통해 가치를 매기고 임금노동에 우선성을 부여하는 체계/문화가 강건한 사회에서 "바빠 죽겠다"는 말은 권위와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읽힌다. 물론 "바빠 죽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내용과 가치는 말하는 자의 성별, 연령, 직업, 소득수준 등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 "바쁜 게 좋은 거야"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여성의 바쁨은 역사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그렇다면, '바쁨'과 '빠름'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여성이 '평등한 노동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

8) 이 원고에 담은 많은 이야기는 『시간을 묻다: 노동사회와 젠더(*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한울아카데미, 2010[Harvard University Press, 2004])를 함께 번역한 김창연, 나성은과의 토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함께 나누었던 고민들은 이 글을 작성하는 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다. 감사를 전한다.

일까. 누구와 평등해지는 것이며, 무엇을 기준으로 평등을 판단하는 것일까. 여성노동이 '시간'을 물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들은 여성의 평생 평등 노동권 주장을 근간으로 한다. 그간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고, 관련 연구들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성차별적 관행을 과거의 유물로 취급하는 문화적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그 자체는 이제 어떤 논리에 의해서도 부정될 수 없는 정당성을 확보한 듯하다. 그런데, 공사 영역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서도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해체될 기미는 좀처럼 뚜렷하게 포착되지 않는다.[9] 전통적 의미의 생계부양자로서 남성의 경제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징후로 여러 가지를 꼽을 수는 있겠으나,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의 해체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양성평등', '남녀고용평등' 등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 법,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왔지만, 그것이 실제로 성별 관계를 어떻게 재구조화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질문의 대상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적 위기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이후 '일-가족 양립' 화두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법명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뀌고, 관련 주제의 여러 '대형' 정책연구들이 생산되었다. 이를 토대로 중장기계획이 산출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물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일련의 지원책 속에서 '여성'은 어떤 존재로 상정되고 있을까. 여성이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될까.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자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만'이 '일-가정 양립'과 연결될 때, 시간 부족, 시간 압박, 시간 갈등 등 여러 이름으로 말해지는

9)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긴 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식 통계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 1990년 47.0%, 2010년 49.4%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05년 50.1%로 집계된 이후 최근 몇 년 간은 2% 내외를 오르내리며 답보 상태를 보인다. 고용율로 살펴보아도 그 양상은 유사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의 원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지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활동'이 공식 통계에 잡히는 유급 노동을 통해서만 파악되는 패러다임 하에서 여성이 끊임없이 일해 왔다는 사실이 비가시화 될 수밖에 없음을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시간문제는 과연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관련 지원책들은 주된 정책대상을 여성으로 설정하게 되는 현실적 필요와, '여성의 역할 갈등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남성은 여전히 '열외'로 남겨두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 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여기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동질적인 자원일 뿐 질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시간을 묻다: 노동사회와 젠더』의 저자 제리 제이콥스(Jerry A. Jacobs)와 캐슬린 거슨(Kathleen Gerson)은 일과 가족, 성 평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이자 논쟁점이 바로 '시간'이라고 주장한다. 시간은 돈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당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시간 압박을 느낀다고 해서 시간을 더 만들어낼 수는 없다. 이른바 '일-가족' 갈등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도 시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은 바로 시간의 이러한 속성 때문이다.

저자들은 일과 가족 갈등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금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자체가 변해왔는가, 임금노동시간 때문에 느끼는 압박감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 노동환경이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성과 남성은 갈등과 딜레마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기업과 국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가, 이때 어떤 관점을 견지해야 하는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시간의 족쇄(time bind)'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달라진 현실을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변화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가정 영역을 넘어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여성의 욕구와 갈망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에게는 직업 기회를 제한하고 남성에게는 집안일에 관여하기 어렵게 하는 '지연된 혁명'은 지속되고 있다(Hochschild, 1989). 저자들은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 특히 어머니인 여성노동자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17~18, 92).

노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가 계약 원리로 작동하고, 노동하는 것이 곧 시민권 획득을 위한 하나의 실천이 되는 근대사회에서 평등한 노동권 보장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한 선결 과제였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사적 영역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 또한 급격히 확산되었다. "방치되거나 버림받는 아이" 혹은 "효(孝)의 가치가 상실된 시대에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의 현실이 –특히 미디어를 통해– 강조되면서 돌봄 공백은 국가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부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을 "갈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괴생명체"로 몰아가거나 여성도 죄책감을 갖는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난 엄마 자격이 없나 봐요" 같은.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한다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지 않은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여성을 어머니로서 본질화하는 주장은 퍼플잡이나 단시간 일자리 창출 같은 정책에서 타협점을 찾은 듯하다. 그리고 이른바 "일하는 여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은 그 타협점에 가려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다. 다시 질문을 던져본다. 평등하게 노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고 익히 알려진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대비 실제 업무효율성보다는 체면 근로시간(face time)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한국사회에서 정부 주도로 여성을 위한 퍼플잡, 여성을 위한 단시간 일자리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지금, '남녀고용평등'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향하는 성별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2. 시간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갈래 길

시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가족 유형과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달라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지배적 유형으로 인식되었던 생계부양자/전업주부 가구는 그 독보적인 지위를 상실해가고 있다.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맞벌이 가족,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 가족, '기러기 아빠'로 칭하는 별거 가족, 동거 가족, 동성애 가족, 독신 등 가족은 그 형태와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이재경, 2005).

이러한 변화는 온종일 자녀를 돌보고 가사를 전담할 무급의 돌봄 제공자를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이 더욱 많아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Jacobs & Gerson, 2010[2004]). '유급노동에 참여할 필요와 요구' 그리고 '돌봄으로 대표되는 가족일'의

경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는 사람들이 일과 가족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를 질문하도록 한다(박영도, 2005; Folbre & Bittman, 2004). 각종 통신수단을 비롯한 기술의 발달은 직장일이 가족생활에 침투하는 것을 보다 가능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가족과 관련한 일을 직장에서 처리하는 길도 열어준다. 직장에서 자녀의 귀가시간을 체크하거나 학교, 학원선생님과 전화통화를 하며 자녀의 생활을 파악하기도 한다. 휴대전화는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할 많은 일들을 이동 중에도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메일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상대의 업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근대적 이분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이에 조력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의 자원과 노력 여하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획득할 수 있다고 말해진다. 과연, 정말 그런가.

『시간을 묻다』에서는 시간문제에 접근하는 관점을 크게 네 가지로 소개한다. 첫째, 자기 수양/시간 관리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바쁜 사람들을 위한 471가지 시간 절약법』, 『하루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611가지 방법』, 『당신의 삶을 정돈하기 위한 간단한 7단계』, 『매 1초 1초를 가치 있게 만드는 101가지 방법』, 『성공적인 시간 관리와 인생 관리를 위한 10가지 자연법칙』 등 자기 수양을 주제로 한 도서가 넘쳐난다. 사실 이 책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저자들은 그 책들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의 양, 그 책들을 읽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고려해보면, 이 지침서들은 자기들이 해결해주겠다고 발 벗고 나선 그 문제를 오히려 키우는 데 일조하는 셈이라고 비판한다.

둘째, 기술적 접근이다. 여기서는 본질적으로 기술을 저항할 수 없는 보편적 힘으로 보며 기술의 총체적 지배력을 강조한다. 기술 혁신은 삶의 속도를 꾸준히 높여왔다. 그런 가운데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모든 순간은 '상실'의 시간이 되어버린다. 대기해야 하는 시간이 생기면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드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동일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압력이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휴대전화는 미국보다 네덜란드에서 훨씬 더 흔하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휴대전화를 주로 업무와 관련해 사용한다. 휴대전화가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암스테르담과 뉴욕에서의 삶의 속

도는 상당히 다르다. 기술적 도구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형태를 규정하는 것은 인간 사회와 사회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적 접근으로, 소비주의와 물질만능주의, '과잉노동(overwork)'이라는 에토스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는 가치, 관습, 삶의 목표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길을 선택하라고 권한다. 저자들은 가치의 변동 자체가 현실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하며, 정책적 함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관점을 비판한다. 어떤 우세한 가치로부터 문제가 파생한 것이라면, 그 가치의 변화만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넷째, 일터 중심의 접근이다. 가족생활의 복잡한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통로가 바로 일터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회사의 가족 친화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저자들은 극소수 직업의 전유물이던 '전문가 정신(professionalism)'이라는 윤리가 사회적·조직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람들을 가족보다 일터로 유인하는 장치, 일터에 오래 머물도록 규제하는 장치들이 만들어져왔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식적으로 가족 친화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 주저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직업 이력과 경제적 복리에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공식적'이라 해도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Jacobs & Gerson, 2010[2004]: 167~174, 220~236).

우리사회에서도 시간문제가 개인화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 1등 위인들이 들려주는 아주 특별한 시간 관리 습관』(박은교, 2011, 니케북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1%의 시간 관리』(김지현, 2010, 성안당), 『하루 1,440분 시간관리』(조주연, 2010, 매월당), 『이기적인 시간술: 시간관리, 절대 하지 말아라』(이토 마코토, 2008, 전나무숲), 『골드우먼: 성공한 여성의 시간관리법』(다이애너 실콕스, 2008, 문지사),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는 시간관리』(나카지마 타카시, 2003, 조형사).[10] 이상은 인터넷 서점에서 '시간관리'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의 극히 일

10) 이 외에도 『바쁠수록 돌아가는 마법의 시간관리』(나카야마 마코토, 2011, 물병자리), 『나를 바꾸는 기적의 시간관리 타임블록』(박종남, 2009, 에이치하우스), 『명품 사원 명품 업무: 야근하지 않는 사원의 특별한 시간관리 비결』(아키니와 도하쿠, 2009, 넥서스BIZ), 『전교 1등 어린이 시간 관리법』(설보연, 2009, 뜨인돌어린이), 『시간을 지배한 사람, 시간에 쫓기는 사람』(노무라 마사키, 2005, 예문) 등 다수가 있다.

부이다. 뿐만 아니다. 인터넷에서 '시테크'[11]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생활 구석구석에서 빛나는 시간관리법", "1등이 되려면 시간부터 혁신하라", "바쁜 당신을 위한 16가지 시테크", "시테크, 쉴 때도 계획 짜서 쉬어라", "시간을 반밖에 못 쓰는 인생 루저", "시테크, 때를 분별하는 지혜", "슈퍼맘의 육아시테크 전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테크 전략" 등의 지침들을 얻을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느끼는 시간 압박이나 시간 갈등의 문제는 전략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지침'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실제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여부가 아니다. 시간에 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시간을 둘러싼 관계의 맥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빠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바쁨'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면서 '서두르고 시간을 쪼개고 시간을 조직하는 능력'은 현대인에게 필수 덕목으로 말해진다.[12] 그러나 시간 문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들과 얽혀 있다.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24시간 주7일 쉬지 않는 경제로의 이행(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Kreitzman, 2001; Presser, 1994)은 가족을 비롯한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거대한 공적 문제인 시간의 정치학은 자기 수양/시간 관리를 강조하는 입장 속에서 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백만 개의 개인적 문제로 환원되고 만다(Hochschild, 1997). 여기서 시간은 관리하고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 관련도서와 지침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는 바로 "누구나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11) 한자어 시(時)와 영어 단어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 '시(時)-테크'(Sitech: Time Technology)는 창의력과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을 단축시키고 여유시간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시간압축의 기술, 시간당 생산성 향상의 기술, 시간의 전략적 활용기술 등을 합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시(時)-테크는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 한국형 시간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시테크 모형을 제안한 윤은기(2004)는 자신의 저서에서 '잠자는 기술, 기분 좋게 자자'라고 주장하면서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효과적으로 자면서 꿈도 꾸고 아이디어도 키워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바로 자신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時테크'라는 단어가 떠올라 당시 출간을 앞두고 있던 책의 제목을 바꾸었고, 이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테크'를 유행시켰다고 쓰고 있다.

12) 거셔니는 계층적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바쁨'은 상층 노동계급을 위한 명예로운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Gershuny, 2005).

못하는 개인의 무능을 탓하기 십상이다.

시간에 관한 이러한 접근은 출판서적이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간 갈등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맞벌이 부부의 경험에 주목한 연구들을 꼽을 수 있는데, 역할 수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 관리 전략을 강조한다(김효정, 2001; 성지미, 2006; 이현아·이기영, 2004; 채로·이기영, 2004; 채옥희, 1997). 이 연구들은 맞벌이 여성이 다중 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시간 부족 현실을 드러낸다. 가족원들의 가사노동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거나 부부의 시간 사용을 비교하여 그것의 성별 차이를 지적하고, 남성들의 장시간 노동이 성역할 고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간의 절대적인 '양'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것의 질적 측면이 간과되는 경향을 보인다. 채로·이기영(2004)은 남편의 직업노동시간 단축과 가사노동 참여를 제안하고, 취업주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체상품 개발을 제언하였다. 김효정(2001)은 재택근무를 하는 기혼여성이 가정 일과 업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제약을 경험하게 되면 취업주부 자신의 일과 가정의 만족도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심리적 안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시간사용에 관해 보다 많이 계획하고 관리하여 문제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직장근무를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표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제때 이루어져야 할 가사노동 과정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 가족원의 건강을 해치거나 가정생활이 제대로 영위되기 어려우므로 가족원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채옥희(1997) 역시 가사노동의 '표준'을 낮추려는 간소화 전략이 가족원의 건강·위생적 측면에서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가족 내의 성역할 규범이나 가정중심성을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관리자'로서의 여성 역할을 강조한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여 시간 갈등에 처하는 것을 여성 개인의 실패로 간주하거나 여성과 가족을 동일시하여 가족의 실패로 간주하는 위험이 있다.[13]

13) 두경자(2000)는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중 하나는 20:80 법칙이다. 이 법칙은 소비 가능한 시간 중 20%의 시간을 목표달성치의 80%에 공헌하도록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0%의 시간가치 비중을 갖도록 하고, 나머지 80%의 시간은 목표

시간은 물론 양화되어 제시된다. 하지만 그것의 경험과 시간을 둘러싼 관계는 양화되어 나타나는 숫자와 결코 동일하지 않다. 주당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와 주당 20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업적 달성도, 업무의 중요도, 동료와의 협조성 등– 조직기여도를 평가할 때, 후자가 전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다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3. 분열된 시간, 지속되는 성 불평등

여성이 '온전한' 노동자이기를 주장할 때, 결과적으로 현재의 시스템과 문화에 적응하는 자만이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의 생애사건이든 구조적 문제이든, 모든 장벽을 이겨내고 직업 세계에 확고히 자리를 잡으면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등극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거나 비정규 노동자로서의 경로를 밟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제도의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시간 배분에 관해 일정 수준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일-가족 양립'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해도 '바쁨'이 차지한 문화적 권력이 해체되지 않는 한, 그리고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그 방안들이 여성을 향하는 한 여성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이상적 노동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든가, '일-가족 양립' 정책의 수혜자가 되든가. 이는 시간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 과제가 '일-가족 양립'이라는 현재의 패러다임 하에서 추구될 때 실질적 효과는 '여성만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타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과로에 시달리는 미국인"이라는 지배 담론에 도전한다. 이에

달성치의 20%에 기여하여 20%의 시간가치 비중밖에 갖지 못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양질의 20%의 시간은 하루의 처음 또는 오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데 사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80%의 시간은 우편물 또는 신문을 읽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일을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대항하는 "(과거에 비해) 여가시간이 늘어난 미국인"이라는 담론에도 도전한다. 줄리엣 쇼어(Juliet Schor)는 자신의 저서 『과로에 시달리는 미국인(The Overworked American)』(1990)에서 연간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노동강도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존 로빈슨(John Robinson)과 제프리 갓베이(Geoffrey Godbey)는 『나를 위한 시간(Time for Life)』(1999)에서 오히려 여가시간이 증가했다고 반박하였다.

제이콥스와 거슨은 이 주장들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측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14]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식의 논의가 노동과 여가 사이의 균형이 왜,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논쟁에는 답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평균적 경향으로 지배 담론을 생산해내는 것을 경계한다. 이들은 모든 노동자를 아우르는 일반적 평균치에서 노동자 집단별로 보이는 차이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면서, '시간 불균등(time divide)'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제시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21~72).

1) 일-가족 불균등(work-family divide)

이는 개개인의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나, 가족 유형과 구성이 달라지면서 시간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가족이 전례 없이 많아졌음을 말한다. 가족생활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지만, 노동 구조는 그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관련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족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성격임을 시인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241~243).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합계출산율이 1.17로 보고되면서 이른바 '1.17 쇼크'로 명명되고 이후 '저출산' 대책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관련 대책이 쏟아져왔지만 정작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의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헛된 것은 아닐까. 제반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 한, 출산율은 획기적으

14) 쇼어는 자기보고(self-report) 방식으로 시간 사용을 측정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간 노동시간이 늘어났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반면, 로빈슨과 갓베이는 시간사용 일지(time-diary) 자료를 분석하여 여가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쇼어는 너무 바쁜 사람은 시간사용 일지를 건성으로 쓰게 된다며 로빈슨과 갓베이의 주장을 비판했고, 로빈슨과 갓베이는 자기보고 방식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보다 과대 추정이 일어난다며 쇼어의 주장을 비판했다(Jacobs & Gerson, 2010[2004]: 37~40).

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결혼이 부계중심주의를 지탱하는 제도로서의 지위와 결부되는 한,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독신자가 많아지거나 비결혼 가족이 많아질 것이다. 또한 이혼가족뿐 아니라 재혼가족 역시 많아질 수 있다. -실제이든 향수이든- '과거'의 가족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혈연중심의 유대보다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유대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높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일련의 변화를 사회구성원 일부의 '변이'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동'으로 인지하는 기반 위에서 노동 구조를 재고해야 한다.

2) 직종 불균등(occupational divide)

노동시간이 아주 긴 사람과 아주 짧은 사람 간의 이분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복리후생이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쪽 극단에는 전일제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복리후생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간외 노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복리후생이 늘어나진 않는다. 다른 쪽 극단에는 시간제 노동자가 있다. 근무시간이 초과할 경우 시간당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복리후생 적용 대상에서 거의 제외된다. 복리후생 비용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이원화할 유인책이 된다.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전일제 노동자에게는 장시간 일하도록 강제하고, 복리후생 대상이 아닌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저자들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243~246, 276~278).

'전부 주거나 아무 것도 주지 않는' 방식은 우리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물적 자원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공식적으로 정규직과 '고용형태'가 다른 것으로 규정되지만, 이는 명목적인 것일 뿐 실질적으로 신분상 위계로 작동한다는 것은 그간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증명하고 비판해 온 바이다.[15] "all or nothing"이라는 극단적 방식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게다가 "nothing"에 해당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점에서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5) 일례로, 필자가 참여한 은행권 차별 실태조사에서도 비단 '월급'만이 아니라 학자금 지원, 임차제도, 경조금 지급, 건강 검진 등의 복리후생을 포함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미애·최성애·조순경, 2006: 228~231).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사회에도 필요한 접근이다.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노동시간에 '비례'한다는 원칙이 기존의 소득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를 재생산하는 방식과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열망의 불균등(aspiration divide)

실제 노동시간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시간 사이에 간극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주당 노동시간이 길수록 그 간극이 크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장시간 노동이 취향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균형을 원하는 열망을 실현시킬 자원이나 능력을 갖지 못한 현실을 상기시키며, 짧은 노동시간 역시 중대한 문제임을 제기한다. 이러한 일자리는 대개 실업이나 불충분한 소득, 재정적 불안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일자리가 여성에게 집과 일터 모두에서 성 불평등을 감내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246~248).

여성이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실증 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표 1〉은 시간제 노동자 비중 및 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16]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일부일 뿐이지만,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간제 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표 1〉 시간제 노동자 비중 및 여성 비율 (2008)

구분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캐나다	벨기에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한국	일본
전체	11.5	14.4	13.4	16.3	12.2	18.4	18.7	22.1	22.9	36.1	9.3	19.6
여성	63.0	64.6	79.5	75.8	68.1	67.8	82.9	79.9	76.1	75.5	59.0	70.4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1988~2008」, 2009. 통계청, 국제통계.

주) 시간제 근로자란 통상 주업에서 주당 30시간 미만을 근무한 사람을 말함.

16) 이 표에는 『시간을 묻다』 6장에서 미국과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유사하여 비교 대상으로 꼽힌 국가들이 그대로 포함되었고, 필자가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였다.

제이콥스와 거슨 역시 어느 국가에서든 시간제 일자리가 압도적으로 여성의 몫임을 지적한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네덜란드를 언급한다. 네덜란드는 연간 노동시간이 가장 짧아 가족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전일제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짧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요컨대,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간'은 시간제 노동이 보편화한 데서 기인하며, 그 일자리 종사자의 75%가 여성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은 네덜란드의 가족생활 지원 방안이 여성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음을 강조하면서 결국 네덜란드 아내들의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되었음을 비판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190~193, 212~216).

이는 '여성의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자료(『노동리뷰』, 2010년 12월호)에 따르면,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73.7%가 여성인데다 이들 중 대다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단순노무 등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6.9%,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가 34.3%이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61.8%로 나타났다.[17] 또한 유연근무제가 여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제11회 남녀고용평등주간'을 기념하여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남녀고용평등정책세미나의 주제는 "유연근무제도와 여성일자리 정책 방향"이었다. 이미 시간제근로자의 다수는 여성이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가장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되어왔다. 더 이상 어떻게 유연화의 선두에 서야 하는가.

4) 부모 역할의 불균등(parenting divide)

이는 시간문제로 인해 자녀가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들은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부적절하기 때문에 유자녀 노동자들이 시간 압박을 더욱 극심하게 느낀다고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직업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문화적 시선을 짚어낸다. 직업이 없는 데서 오는 고립 가능성과 경제적 불안정보다는 바쁜 생활이 낫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젊은 세대에서 나타난다

17) 여성신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말 반듯할까?: 멀쩡한 일자리 쪼개 숫자 늘리는 데 급급하지 말아야," 2011년 2월 18일자.

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노릇과 노동을 통합하고픈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Jacobs & Gerson, 2010[2004]: 249~250).

저자들은 이 책 전반에 걸쳐 맞벌이 부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지 않아도 노동인구에 속하는 가족원이 많아지면 시간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논의들이 '일-가족' 갈등에 관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개인에 초점을 둠으로써 '일-가족' 갈등이 시간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다루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맞벌이 부부의 시간 압박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결하는 해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일하는 어머니'의 과중한 부담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마찬가지로 단시간 노동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듯이, '제도 결혼'으로 진입한 이들의 이념적·실질적 지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특히 높은 한국사회의 맥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혼자가 아님으로 인해 혹은 기혼자이지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른바 결혼여부, 자녀유무를 둘러싸고 노동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제로섬 게임'의 양상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5) 성 불균등(gender divide)

일과 가족, 긴 노동시간과 짧은 노동시간, 이상과 현실 간의 다층적인 불균등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성 불균등의 원인이다. 성 불균등이란, 여성에게 가족의 필요와 직장의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가장 혹독한 딜레마를 겪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또 다시 여성의 시간제 노동과 연결된다. 시간제 노동으로는 가족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경력 개발 기회도 얻지 못하기에 성 평등과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장시간 노동 문화는 여성을 시간제 노동으로 내모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Jacobs & Gerson, 2010[2004]: 28, 250~252).[18]

18) 장시간 노동 문화의 발전은 일종의 남성성과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남성성은 여성에 비해 가사노동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용시간이 더 많은 데서 파생된다. 여성이 능력, 숙련, 경험의 차원에서 남성에게 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성을 여성에 비해 노동에 보다 적합한 존재로 구분

시간제 노동의 의미와 시간제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가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간제 노동에 부정적인 가치만을 부여하는 것도 일면적인 접근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배적인 '시간 규범'이 무엇인가에 있다. 저자들이 인용하고 있는 엡스타인 외(Epstein et al., 1999)는 법조계를 비롯하여 업무 압박이 높은 직종에서는 주당 40시간이 '시간제'로 정의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런 계통에서의 시간 규범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이는 다시 '표준'의 문제로 연결된다. 시간제 노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것은 표준이 '전일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복리후생의 문제를 상기시킨다. 표준이 전일제인 사회에서 시간제 노동과 전일제 노동이 단지 노동시간의 양적 차원에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반드시 짚어져야 한다. 이것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여성에게 더 적은 시간 일해도 괜찮은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괜찮은 것인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4. 성별 격차에 대한 설명, 지형이 바뀌고 있다

〈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국가별로 다르지만, 종사자의 대다수는 여성인 경우가 많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우리에게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선택'의 의미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킴(Hakim)은 페미니즘이 경제활동 참가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성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희생자/피해자 페미니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여성에게 기대되는 바 혹은 금지되는 바가 아니라 여성이 '원하는 바'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여성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가정지향적(home-centered), 적응적(adaptive), 노동지향적(work-centered) 이렇게 세 집단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그녀들에게 선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Hakim, 2000). 하지만 질문을 분명하게 한다고 해서 대답 역시 명료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말을 통해 100%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과연 선호한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의 성격이 어떠한지는 오히려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기까지 하다.

짓는 결정적 특징이 바로 시간인 것이다(Rutherford, 2001).

자발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시간제 근로에서의 자발성과 일자리 만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향후 자발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성지미·안주엽, 2007). 유연근무제를 다룬 연구들에서 '여성'은 -기혼, 유자녀, 유배우자, 30대 이상 등- 일정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여성이 갈등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연근무제가 유용함을 역설한다. 게다가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김정희·반정호·이정훈, 2008; 최숙희, 2010; 황수경, 2011).

다시. 자발성을 어떻게,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여성의 이중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와, 그것을 여성의 욕구/자발성으로 위치 짓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문제 설정의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또한 원하는 바를 질문하여 해법을 찾는다고 할 때,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선호도 조사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다수의 의견'이나 '다수의 선호'라는 명목으로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방식은 문제의 근본은 정작 건드리지 않으면서 생색내기 좋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제이콥스와 거슨은 이론적으로 볼 때 여성이 시간제 노동을 선호하는 정도는 '자발적인' 시간제 노동의 비율을 분석하면 규명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제 노동을 선호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를 구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여성의 선호를 사실상 거의 밝혀내지 못한 채 측정한 '자발적인 시간제 노동' 비율이 여성들의 자발성으로 간주되고 만다는 논의(Bardasi and Gornick, 2002)를 가져온다. '전일제' 근로가 표준인 사회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전일제와 시간제 노동이 여성의 선호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라는 표제 아래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시간을 둘러싼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는 은폐된다.

〈표 2〉 30-59세 성인의 1주 평균 시간 배분

(단위: 시간, %)

구분	시장노동	가사노동	총 노동	여가	개인유지	총 시간
한국, 1999						
남	54.5 (32.4)	4.4 (2.6)	58.9 (35.0)	36.9 (22.0)	72.2 (43.0)	168 (100.0)
여	28.4 (16.9)	34.4 (20.5)	62.8 (37.4)	34.4 (20.5)	70.8 (42.1)	168 (100.0)
한국, 2009						
남	49.3 (29.4)	6.0 (3.6)	55.3 (32.9)	36.2 (21.5)	76.5 (45.5)	168 (100.0)
여	26.5 (15.8)	31.8 (18.9)	58.3 (34.7)	34.5 (20.5)	75.2 (44.8)	168 (100.0)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2009; 황수경(2011: 6)에서 재인용.

사실 여성은 끊임없이 일해 왔다. 최근 정부 정책이 주도하여 단시간근로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1980년대부터 기혼여성은 이미 국가로부터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영역 종사자로, 시간제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편입되어왔다(김현미·손승영, 2003: 84~88; 이숙진, 1997: 167). '기혼여성'이 단시간근로자의 다수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지금 이들의 단시간근로에는 자발적 선택, 개인적 선호이자 욕구라는 외피가 덧씌워진다. 그렇기에 성별분업 강화가 문제시되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가족시간도 충분히 가지려는 개별노동자들의 행위 전략으로 위치지어진다. 요컨대, '억압', '종속', '차별'이라는 언어로 말해져왔던 경험과 구조가 이제는 '선택', '선호', '전략'이라는 용어로 옷을 바꿔 입고 있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메이어와 고닉(Meyers and Gornick, 2002)의 연구는 '자발성'이나 '선호'와 관련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중요한 질문은 '여성과 남성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아니고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가?'도 아니다. '여성은 생계벌이자로, 남성은 돌봄 제공자로 온전하게 인정받는 세상, 노동자가 임금노동과 부모노릇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직업 구조가 갖추어진 세상, 공공 정책이 남녀 모두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세상. 즉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뀐 세상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생계벌이 및 돌봄 제공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이다(Jacobs & Gerson, 2010[2004]: 249)". 앞서 저자들은 시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이 정책적 함의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지만, 제도의 개선이 가치의 변화와 함께 가지 않는 한 가족친화가 곧 여성친화와 동일시될 위험을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기도 하다.

5. '일-가족', '일-가정' / '양립, 균형, 조화, 통합' 구도를 재고하자

시간이 인식되고 구성되는 방식 중의 하나는 성별관계를 통해서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는 익숙한 논의들 역시 시간이 성별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결부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간문제의 해법을 개별 노동자의 행위 전략 차원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은 남성의 경제활동과 달리 여성의 경제활동이 문제화되는 배경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 노동력이, 여성의 노동권이 '대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조절되어야 할 대상이 되는 오류를 피할 방법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나 '일-가족' 갈등의 출현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에서 기인한다는 전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의 기저에는 성별분업 통념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가사와 돌봄을 담당해야 할 여성이 집 밖의 시장노동에 참여하면서 '일-가족' 갈등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바로 현재와 같이 여성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퍼플잡이나 단시간 일자리 정책을 낳고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 체제에 도전하지 않은 채 '편의성'과 '즉시성'만을

고려해서 도출되는 정책은 결과적으로 육아나 가사노동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만이 '이상적인 노동자'로 인정받는 현실을 지속시킨다.[19]

저자들이 주장하듯, 시간이라는 문제는 일과 가족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하지만 시간을 문제화하고 지향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은 '일-가정 양립'이라는 우산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현재의 구도에서는 전형적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표준적 '일'과, "굳이 대놓고 들이대지 않아도 결혼을 한 부부에만 해당되는(김영옥, 2011)" '가족'의 견고한 틀을 깨기 어렵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자들은 분석의 초점을 맞벌이 부부에 맞추고 있다. 노동인구에 속하는 가족원의 수가 많아질 경우 개인의 노동시간은 증가하지 않더라도 시간 압박은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1970년대의 맞벌이 부부도 시간 압박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을 터이나, 그런 상황에 있는 가족의 수가 훨씬 적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해낸다.[20] 실증 자료를 보면, 개개인의 주당 노동시간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정세를 보인다. 그러나 연간 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이는 연간 노동주간이 늘어나고 공식 통계에 잡히는 여성 노동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Jacobs & Gerson, 2010[2004]: 73~80).

이런 분석은 한국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구, 가족)에 대한 정의와 통계의 일치성이 미흡할 정도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가 없다. 그래서 부부 공동부양자 가족의 비율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알기 어렵다(조주은, 2008)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맞벌이 가구 현황에도 '남편-아내'가 아니라 '남편-주부'로 구분되어 있다.

---

19) 역자서문 p.8.

20) 저자들은 '과잉노동'이 지배담론이 된 데는 맞벌이 부부의 수가 증가한 것이 작용했는지를 보기 위해 1970년과 2000년의 맞벌이 부부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0년에 비해 2000년 맞벌이 부부의 총 노동시간이 10.6시간 증가했는데, 이중 맞벌이 부부 비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8시간이나 된다. 노동시간이 증가한 건 2.6시간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맞벌이 부부의 성격 변화도 고려한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부부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력도 대졸 이상이 많고 관리직에 종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노동시간의 순수한 증가분은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Jacobs & Gerson, 2010[2004]: 77~84).

저자들의 논의가 시간과 '일-가족' 문제를 부부 중심의 핵가족 안에서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이 주제의 지형을 확장해야 할 필요를 상기시킨다. 사실 한국사회의 맥락에서는 시간 압박을 유자녀 기혼노동자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가족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가족이 우선시되는 경향 역시 지배적으로 존재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가족' '양립'이든 '일-가정' '균형'이든, '일-가족' '조화'든 '일-가정' '통합'이든 왜 '일'은 늘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질문할 필요를 제기하고 싶다. 'A와 B'라는 구도는 마치 어떤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테마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그간 시간의 구성과 시간의 조정, 그리고 시간의 경험까지 일터 중심인 상태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다(Rutherford, 2001: 261)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할 많은 문제가 혹시 여전히 노동중심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속에서 "삶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명제의 계층성이 감추어질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명제는 노동인구가 분절되는 양상을 비가시화하며, 보편 담론으로 통용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삶들'이 필연적으로 배제될 위험을 동반한다. 심지어 빠른 삶이 표준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치 누구나 유연성을 최대의 가치로 추구한다고 전제하는 논의는 바로 이러한 표준에 포섭되어 있다. 안정성을 훨씬 더 절박하게 원하는 집단도 있다.

저자들은 가족 복지와 성 평등이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그리고 남성의 상황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1인 소득에 의존하는 '가족임금'의 붕괴, 자신의 생활을 가정 중심으로 한정하지 않으려는 여성의 증가 같은 진전은 결코 그 방향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돌봄이 이념적으로는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는 그래서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국미애·최성애·조순경(2006), 『젠더 노동과 간접 차별』, 푸른사상.

김경희·반정호·이정훈(2008), "가족친화 고용정책의 기업수용성 분석: 유연근로제도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4권 2호, 한국산업노동학회.

김영옥(2011), "여성의 시민권 확장과 시민 노동자의 삶의 질 관점에서 본 일-생활 통합," 생생여성노동행동 주최, 한국여성노동자회 주관 모성보호관련법 개정 10주년 기념 토론회 〈일·생활 균형, 이제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김현미·손승영(2003), "성별화된 시공간적 노동 개념과 한국 여성노동의 '유연화'," 『한국여성학』 제19권 2호, 한국여성학회.

김효정(2001), "기혼여성 재택 근무자와 직장 근무자의 가사노동 시간 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2호, 한국가정관리학회.

두경자(2000), "시간자원 관리 방안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제13호, 상명대 사회과학연구소.

성지미(2006),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 요인," 『노동정책연구』 제6권 제4호, 한국노동연구원.

성지미·안주엽(2007), "시간제 근로에서 자발성과 일자리 만족," 『노동경제논집』 제30권, 한국노동경제학회.

윤은기(2004), 『시-테크 & 휴-테크』, 무한.

이숙진(1997), "'일' 개념과 노동시장의 성별구조화," 한국여성연구원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현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여성〉.

이재경(2005),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여성연구』 제68호, 한국여성개발원.

이현아·이기영(1994), "남편의 생활 시간 구조와 가정 생활 문제에 관한 부부의 지각: 장시간 노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2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5호, 한국가정관리학회.

채옥희(1997), “취업주부 가사노동의 시간 관리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1호, 한국가정관리학회.

최숙희(2010), “퍼플잡 추진을 위한 과제,” 『젠더리뷰』 제16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Ⅰ, Ⅱ』, 한국학중앙연구원.

황수경(2011),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유연근무제 정책과제,” 고용노동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2011 남녀고용평등정책세미나: 유연근무제와 여성일자리 정책방향〉.

Folbre, Nancy & Michael Bittman(2004), Family time: The social organization of care, Routledge.

Gershuny, Jonathan(2005), “Busyness as the Badge of Honor for the New Superordinate Working Class,” Social Research 72(2).

Hakim, Catherine(1996), “The sexual division of labour and women's heterogeneit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7(1).

_____(1998), “Developing a Soci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reference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9(1).

_____(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Prefere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Hochschild, Arlie Russel(1997),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s and homes becomes work, Henry Holt and Company.

Jacobs, Jerry A. & Kathleen Gerson(2004), The Time Divide: Work, Family, and Gender Inequality, 국미애·김창연·나성은 옮김(2010), 『시간을 묻다 - 노동사회와 젠더』, 한울.

Kreitzman, Leon(1999), 24 hour society, 한상진 옮김(2001). 『24시간 사회』, 민음사.

Presser, Harriet B.(1994), "Employment schedules among dual-earner spous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y gende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3).

Rutherford, Sarah(2001), "'Are You Going Home Already?': The Long Hours Culture, Women Managers, and Patriarchal Closure," Time & Society 10(2-3), pp.259 ~ 276.

3

여성노동, 돌봄에서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이숙진 |대구가톨릭대 연구교수

1. 문제제기

최근 여성주의 진영을 비롯해서 학계와 시민사회계 그리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복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복지'에 대한 논의구조가 저소득 빈곤계층에 대한 잔여적이고 선별적이며 심지어 시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협소한 의미로부터 탈피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보편적', '역동적' '공정한'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고 있고 있기는 하나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이제 우리가 논의하는 복지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사회권적 의미를 담보하고 국가를운영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복지 체제를 갖추는가에 따라 국가의 형태와 성격을 달리하는 개념으로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복지국가'를 여성의 관점 특히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여성주의 가치론과 존재론에 입각해 매우 당연하며 반드시 필요한 지점이다. 그것은 여성주의는 여성의 일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하며 동시에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별분업 구조가 여성의 존재론적 위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성은 늘 '일'을 해왔다. 그런데 교환가치만을 창출하는 시장노동에 대한 우위가 강고히 자리잡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여성의 '일'은 늘 왜곡되어 이해되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사용가치를 창출하는 무임의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가사노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가족일 경우 화폐가 지불되지 않지만 사회적 영역에서 시장화 혹은 상품화될 경우 그 노동은 수행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안에서 여성들이 주로 해왔던 가사노동은 후기산업사회에 와서야 비로소 '돌봄'노동의 형태로 재정의되고 있다. 그것은 산업사회 이후 새로운 사회의 위기로 일컬어지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다양화로 인한 돌봄의 부재 등이 나타나면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

'돌봄' 논의는 여성의 일 혹은 여성노동의 관점에 제한되지 않으며 그 개념적 혹은 철학적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돌봄의 윤리' 혹은 '돌봄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 중심 사회'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다.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되는 가족내 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편이 있는가 하면, 생산노동 못지않게 사회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일 자체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산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시되고 있다. 사실 자본제적 시장경제하에서 가족내 돌봄의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던 여성들은 바로 그 이유로 인해 근대적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이자 생존의 수단인 노동력의 상품화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또한 바로 그 이유로 인해 남성생계부양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하는 존재가 되었다.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차별과 억압 역시 돌봄은 자연스레 여성의 특성이자 역할이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기인했으며, 일하는 여성의 낮은 임금과 저지위에도 언젠가는 가족의 돌봄 담당자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작동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돌봄'을 소위 '복지국가'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인정하고 제도화했는가. 모든 '복지국가'는 성평등주의적 지향을 가졌는가. 이때의 성평등주의

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전망하는 '복지국가'에서의 '돌봄'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 사회인가. 이글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으며 이를 여성주의의 국가에 대한 접근, 젠더관점과 복지국가그리고 돌봄노동과 복지국가의 여성'들'이라는 주제로 다뤄보고자 한다.[21]

21) 이 글은 '복지국가와 돌봄포럼'(2011. 6. 4)에서 발표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 여성주의와 복지국가

여성주의는 국가를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국가 자체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지지하는 기구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지배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는 자본축적을 지원하는 자본주의 국가이자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생산하는 가부장적 국가였다. 따라서 국가를 바라보는 여성주의 진영의 시각은 국가 자체의 가부장성에 주목해왔으며 오랜 시간동안 정치적 주체 혹은 경제적 주체로서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직, 간접적 주체로서의 국가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국가'가 지닌 자원과 권력의 영향력에 근거하여 국가가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능한가, 국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등에 논의도 꾸준히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여성에 대해 적대적인 장소이기만 했던 국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게 된 것은 복지국가를 통한 여성 현실의 변화를 주목함으로써 보다 진전되었으며, 이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난 지난 4-50년간의 변화 때문이기도 했다. 최근 풍성해지는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진영의 관심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여성주의 진영에서 국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가장 친화적인 성향은 국가페미니즘(statefeminism)이다. 국가페미니즘은 국가 조직과 운영, 정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여성지위를 개선하고 성평등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페미니즘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여성의 권리를 출발점으로 하여 각 정부조직,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에 여성주의가 참여하며 페미니즘을 제도화(Hernes, 1987)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김대중.노무현정부 10여년은 형식적으로 반여성주의적이거나 보수적인 정치공동체였다고 평가받지는 않는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매우 느슨하게나마 우리는 국가페미니즘의 단초를 경험했으며 그것의 득과 실에 대한 평가 역시 다양하다.[22] 여성

22) 이숙진(2011)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국가 페미니즘의 형성기이자 여성과 국가의 관계변화를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언급하며, 성주류화의 도입과 보육정책을 통한 젠더레짐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시기였다고 보며, 김은실(2011)은 참여정부에서의 국가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을 통해 "여성주의자들이 국가의 정책과정에 깊이 참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은 한국여성역사에 중요한 정치경험이며 국가와 여성의 관계를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상상적 자원"이라고 기술한다. 그리고 "한국의 페미니즘의 주류화 전략은 (성주류화이든 제도화이든) 큰 그림속에서 볼 때 IMF 이

주의의 국가 개입과 성주류화를 통한 성평등 의제의 실현이 국가를 통해 가능한 가 '국가', '국가'의 본질적 특성이 지닌 가부장적이며 관료적인 그리고 정책기구라는 제한된 범위의 한계를 가지고 성평등이라는 여성주의의 과제를 일상적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가. '국가'와 친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여성주의 진영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며, 잃어버린 것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여성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 가부장제로서의 '국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달럽(Dalerup, 1989)의 지적처럼 국가와 여성의 관계는 일반화될 수 없으며, 국가페미니즘에 대한 우리의 경험 역시 단절적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동적인 젠더정치의 과정이 가부장적 자본제에 대한 과정적 균열을 통해 지배적 가치에 대한 전복을 꾀하듯이, 국가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의 균열 역시 단선적이지 않되 지속성을 담보하며 나아가야 하는 대장정이기도 하다.

'국가'에 대한 불신이 (어쩌면 영구히)남아있는 상태에서 한국사회의 '복지'담론에 제도로서의'복지국가', 국가운영전략으로서의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또 여기에 여성주의적 전망을 담는 것이 그리 쉬운 여정은 아닌 듯 싶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국가에 주목하는 것은 그나마 '국가'라고 하는 정치조직 혹은 공동체의 특성상 가장 발전된 국가 형태가 '복지국가'이며 이는 민주화를 전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입이 가능한 국가형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별화된 시민권을 문제 삼는 성평등은 민주주의를 기반하지 않고는 확보될 수 없고, 최근에 경험한 자유권적 시민권의 위기는

이미 확보된 기본권적 권리도 정치공동체의 특성에 의해 박탈될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여성주의 진영에서는 어떤 '복지국가'를 최선으로 지향하는가. 복지국가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복지국가에 대한 다수의 저작들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에는 '돌봄'이 자리잡고 있다. 전후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리우며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던 케인지언 복지국가의 '복지'는 질병과 실업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을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려는

후 더욱 가시화된 국가통치 개념의 재정립과정 속에서 재구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더 큰 국가경쟁력을 근본으로 하는 세계 신자유주의체제의 국가통치 속으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것이었고 이는 산업화논리와 남성부양자가족을 근간으로 했다.

이 시기의 '복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과물로 나타난 재생산의 위기를 흡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사유가 개입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이 케인지언 복지국가가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복지국가를 부정하고 재정축소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위기를 지적하는 가운데 여성주의는 가부장적 복지국가를 비판했고그 비판의 근저에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론적, 가치론적 문제제기를 포함했다.

그리고 복지국가는 위기가 아니라 '재편'되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여성'의 변화된 역할과 더불어 '여성, 가족,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남성, 시장, 국가, 사회'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

3. 젠더레짐과 복지국가

1) 젠더, 젠더관점 그리고 젠더레짐

복지국가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 젠더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점차 '젠더'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인가를 깨닫고 있다. 생물학적 '성'과 사회문화적인 '젠더'의 구분은 결정론과 구성론을 대변하는 개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제 이 둘의구분은 분명하지 않다. 기든스(A. Giddens)도 성(sex)에 대한 정의가 친밀성과 생식기에 관련된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자아의 정치학 내에서 자기를 양식화하는 기술로 변형되고 있다고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논자들은 성별화된 사회에서 '성별화되는 것'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면서 여성 정체성의 보편성에 대한 해체를 주장했고, 성별전환(trans-gender)은 생물학이 아닌 자기 정체성이 성별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의 경험을 단일하게 보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짚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어쩌면 이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만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23] 그러나 이 논의는 젠더 불안정성을 이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다만 돌봄과 관련하여 모든 여성들이 제도적, 정책적

23) 최근 한 모임에서 외모로는 남성이나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를 보며, 나는 그/그녀를 여성으로 대했는지, 남성으로 대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았다.

수준의 돌봄노동과 단일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이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은 훨씬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를 젠더관점에서 전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젠더관점에 대해 정의해야 한다. 젠더관점은 젠더 위계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를 의미한다. 젠더를 사회관계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설정 및 남성성과 여성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체로 개념화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돌봄을 둘러싼 역할과 특성에 내재한 권력관계의 작동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돌봄이 누구의 일이며[24], 그 일이 어떤 장소에서 수행되며, 그 일에 대한 평가와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와 관련된 권력관계이다.

복지국가가 이러한 돌봄을 어떻게 제도화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젠더-정책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인즈베리(Sainsbery, 1999)는 레짐(regime)을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총합으로 인간의행태나 인간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성별화된 사회에서의 젠더관계를 규정하는 가치, 규범 및 규칙들의 틀'이 젠더-레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원리를 개념화한 것일 수 있다. 젠더 레짐을 정책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젠더-정책레짐을 별도로 정의하자면 "특정국가의 사회정책의 내용 및 논리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젠더이데올로기, 젠더관행 및 양성간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방향성의 총합"(원숙연, 2003)이라고 설명한다. 즉 복지국가에서 돌봄의 제도화를 살펴보는 것은 복지국가의 성격을 규명하는 '사회-정책 레짐'[25]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젠더관계와 관련된 패턴으로서의 젠더레짐으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여성주의 진영의 논의인 것이다. 이때의 젠더관계는 주로 '돌봄'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모델로 구분되고, 돌봄역할, 즉 돌봄을 누가 수행하며,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를 중심으로 복

24) 보편적 돌봄 수행자 모델에 기초하면 돌봄을 여성의 일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여성이 가족안에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돌봄을 여성의 특성으로 바라보는 성역할이데올로기가 존재하므로 돌봄을 행하는 대부분의 주체를 여성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5) 사회정책레짐이란 '경제적, 법적, 정치적 요소의 구성체로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관통하는 제도화된 패턴'을 말한다.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레짐유형은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국가의 유형이 나뉘고 있다.[26] 여성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를젠더레짐에 기초하여 구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역할 분리에 따른 이데올로기와 관행 그리고 역할을 중심으로 편재되는 사회정책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

모든 복지국가가 성평등한 젠더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복지레짐을 통해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한 에스핑-앤더슨의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복지레짐은 복지 제공에서 국가와 시장 사이의 관계, 복지국가가 사회의 계층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탈상품화라는 분석수준에서 복지체제의 질적인 차이를 구분했으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조합주의 그리고 사민주의 체제라는 복지레짐으로 나누었다.

<표 1> 에스핑-애더슨의 복지레짐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계층화	이원화	분절적	통합적
탈상품화(사회권)	최소한(개인책임)	중간(남성중심)	최대한(양성평등)
재분배(조세반동)	낮음(높음)	중간(중간)	높음(낮음)
인적자원관리	시장중심(형식적 교육)	공공역할중시 (무상교육)	포괄적 (무상교육, 여성참여)
완전고용	높은 고용율, 노동시장이원화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율	높은 고용율, 높은 생산성

자료:이혜경(2010), "복지, 왜 젠더관점이 필요한가?", 젠더네트워크포럼

여성주의자들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레짐이 개별 국가의 복지제도 형성 이전에 이미 가족에서 고착된 성별분업과 이에 대한 사회의 낮은 평가,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의 기회의 불평등문제 등이 복지제도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복지국가의 질적 특성을 구분하는 사회권[27] 지표로서 탈상품화를 제시한

26) 복지국가를 젠더레짐으로 구분하는 논의들은 "복지국가와 돌봄포럼"의 장지연박사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논의에서는 생략한다

27) 사회권이란 시민들이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그 사회의 중요한 활동과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권이 보장된 상태를 말한다. 남성의 경우 노동의 상품화를 전제로 실

에스핑-앤더슨의 젠더 관점 결여에 대한 지적은 여성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 에스핑-앤더슨은 유급노동에 대한 의존을 완화시키는 '탈상품화' 효과가 큰 국가일수록 사회권에 기초한 복지국가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권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분배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임금노동자로 생활하는 남성의 생애주기에 기초하고 있으며,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완전히 상품화되지 못한 노동력으로 여전히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고 있는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고 있으며, 가족내 성별분업과 여성노동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사회권은 시장의존으로부터의 해방, 시장과 유급노동에의 의존을 약화시킬 수 있는 탈상품화가 기본원리이나 이러한 탈상품화는 돌봄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노동력의 상품화가 이뤄지지 못한 여성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문제라는점이다. 라이라(Leira, 1994)는 에스핑-앤더슨의 논의가 성별분업이 복지제도에 의해 변화될 수는 있지만, 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간과했고, 특히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성별분업에 대해 무심했다고 비판한다. 이는 결국 국가-시장-가족 사이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원인이 된다.

이러한 여성주의자들의 비판을 인식하고 에스핑-앤더슨은 탈가족화 개념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데 탈가족화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가족 내지 혼인에 의한 상호성과분리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처분권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Esping-Andersen, 1999). 즉 이전에 가족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형태의 돌봄노동을 국가 또는 시장에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돌봄의 사회화 혹은 돌봄의 시장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념과 방향이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서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전업주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세인즈베리(Sainsbury, 1996:86)는 탈가족화를 "여성가구주 가구에 적절한 생계를 마련해주는 복지권" 및 "가족관계로부터의 독립권"으로 본다. 오코너(O'Connor)는 탈상품화 개

업 질병·산재·노년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이루어지는 사회적 보호수준이 탈상품화 수준을 반영하게 되며, 이러한 탈상품화 수준은 한 국가의 사회권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Esping-Andersen, 1990).

념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가족과 국가에 대한 공적인 의존으로부터의 개인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올로프(Orloff)는 '독립성' 개념을 통해 남녀 모두에게 노동을 요구하는 노동중심 일원체계를 강조하고 여성이 완전한 시민권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돌봄노동에 대한 책임 때문이므로 여성들이 임금노동을 하는 동안 돌봄노동을 대신할 공공 보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사회복지급여,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및 노동시장관련 규제 등을 통해 독립적 가구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혼인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에 속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지고 기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차원, 탈가족화할 수 있는 자율성(autonomy to 'defamilialisation') 등으로 탈가족화를 해석하고 있다(O'Connor, Olroff, Shaver, 1999:32). 이렇게 볼 때 탈가족화는 가족 내 돌봄노동을어떤 방식으로 사회화시키는가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 내지 가구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복지급여, 삶의 형태와 무관한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및 그 안에서의 차별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사회권 개념과 관련하여서, 라이라(Leira, 2002)는 양육자의 성별에 따라 사회권이 다르게 개념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권의 범위에 가사와 돌봄노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인즈베리(Sainsbury)는 돌봄의 수급권 자격을 고려하여 복지국가를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인적 모델(individual model)로 구분하고, 성에 의한 계층화가 없는복지국가 모델은 개인적 모델에 기초하며 대표적으로 스웨덴을 예로 들고 있다.

오스트너와 루이스 등은 젠더레짐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남성부양자모델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 이는 강한 부양자모델, 온건한 부양자모델, 약한 부양자모델로 나뉜다(조흥식 외,2006). 강한 부양자모델은 여성의 양육역할과 시간제노동선호, 부양자의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특징으로 하며, 온건한 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전일제 노동과 혼합형 사회보장제도이며,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해서라기보다는 취업자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약한 부양자모델은 어머니의 지속적인 전일제 취업과 개인적 청구권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로 구성되어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남녀 모두의 사회권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부양자 모델은 노동권, 젠더관계, 사회보장제도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복지국가에서의 젠더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표2> 복지국가의 부양자모델과 개인적모델

차원	부양자모델	개인적모델
가족이데올로기	엄격한 성별노동분리 남편=취업노동 부인=돌봄노동	역할 공유 남편=취업.돌봄노동 부인=취업.돌봄노동
수급권	부부간차이	부부간 동일
수급권의 근거	부양자	시민권.영주권
수급단위	가구	개인
기여단위	가구 또는 가족	개인
조세	부부공동조세 피부양자 공제	부부분리조세 동일한 조세감면
돌봄노동 책임소재	가족	국가
돌봄노동 보상	무급	수급권을 통한 보상

자료:Sainsbery(1996:42), 김인숙,정재훈(2008), p.235재인용

초기복지국가는 남성-생계부양자-노동자, 여성-생계의존자-주부라는 성별분업을 전제로 여성을독립된 개인이 아닌 남성배우자를 통해 차등적으로 사회에 통합되는 존재로 규정했다. 그러나 기존의 복지레짐에 대한 비판과 젠더레짐에 기초한 여성주의의 복지국가는 공적영역의 일부인 복지제도 자체의 분석뿐 아니라 제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틀, 무급 노동의 사회적 분포 및 그에 대한 가치평가, 노동시장의 성위계적 구조 등을 복지제도가 처한 젠더체제(O'Connor, Orloff, Shaver, 1999)로 이해하면서 기존의 유형을 비판하고 젠

더관점에서의 복지국가를 설계해왔다.

결국 서구복지국가들의 유형을 젠더관점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성별분업(남성은 직장, 여성은 가정)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여성을 주부나 피부양자로 역할지우는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2인의 소득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종 사회정책(사회보장, 조세, 보육, 노동 등)을 설계한다. 그러나 남유럽 혹은 영미형은 약간 혼재된 형태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여성/어머니, 주부 혹은 부차적 소득자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국가의 보육서비스 확대보다는 어머니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한 독일은 여성의 노동권 강화보다는 어머니 역할을 지원한 나라에 속한다. 스웨덴은 그 반대로 양육수당 대신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을 높인 나라이다. 명백히 각종 성평등 지표들은 스웨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약화시키는 사회정책은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더불어 합계출산율과 여성고용율 증가의 효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독일도 최근에는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보육서비스 재정을 확대하고 여성고용을 높이는 쪽으로 재정투자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복지국가 재편은 '돌봄'의 재구조화와 함께 이를 둘러싼 성별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 현실에 비추어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논의를 모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가 돌봄에 있음을 주목하고, 돌봄은 무엇이며 돌보는 노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돌봄노동과 복지국가

1) 돌봄(care) 노동에 대한 이해

'돌봄' 혹은 '보살핌'으로 번역되는 'care'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의 논의들은 길리건(Gilligan)[28]의 '돌봄의 윤리' 이후 다양한 영역과 주제로 접근되어왔지만 정책연구의 주제가 된 것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돌봄비용이 '사회정책'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면서부터이다. '돌봄'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은 오랫동안 가족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의무를 특징으로하며, 여성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성역할로 간주되면서 사회적으로 낮은 가치를 지님과 동시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차별요인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이었다.

'돌봄'을 사회정책의 주제로 다루기전에 이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잠깐 빌어오면, "돌봄은 도구적 과제수행(노동)과 애정적 관계(사랑) 양자를 아우르는 행위"로 기존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이론에서 설명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

28) 길리건은 여성의 윤리로 돌봄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케어하는 자질에 대해 스스로를 비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과연 케어는 여성의 자질인가..다시 질문하고 싶다. 길리건에 대한 비판 가운데 여성에게 돌봄이 자연스럽다는 논지는 어쩌면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가깝고 그런 면에서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가정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고 있다. ‘돌봄’ 그 단어 자체는 정서적이고 도덕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일부 학자들은 돌봄의 동기가 이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간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돌보는 노동(caring labor)'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웨어니스(Waerness, 1987)와 라이라(Leira, 1994)는 본질적인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전통적인 경제학적, 의미의 일과 다르다는 점에서 돌보는 노동을 강조한다.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돌봄‘이 질의 표준화를 이룰 수 없으며 사람과 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디너(Gardiner, 1997)와 힘멜바이트(Himmelweit, 1999)는 ’노동(work)‘으로 ‘가족 돌봄(family care)’을 등치시키는 것은 돌봄의 대인적이며 정서적인 차원을 반영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유급돌봄(paid care)이라도 완전한 상품화에는 저항한다. 결국 돌봄은 감정과 노동이 혼재된 행위이며 감정의 표준화, 상품화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노동과 사랑의 두가지 행동양식이 기대되는 돌봄에 대해 경제학 진영의 논의는 보다 실용적이다. 전통 경제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의 다른 이름일 수 있는 ‘돌봄 경제학’의 이론가 낸시폴브레(N. Folbre)는 '돌보는 노동(caring labor)'을 ‘노동(work)'으로 보며, 이를 “수혜자의 복지에대한 관심으로 동기화되며,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유지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개인의 존재를 가정하는 시장합리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돌봄노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경제학자들의 접근은 실증적으로 ’동기‘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 직면한다. 따라서 동기보다는 이용자의 상태(capabilities)를 좋아지도록 하는 개인 대 개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work)으로 돌봄을 정의한다(England, Budig, and Folbre, 2001). 이때 상태(capabilities)는 ’건강, 숙련들 또는 성향‘들이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 육체적, 인지적, 그리고 정서적인 숙련(자기규율, 동정 그리고 돌봄)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부모, 가족, 친구,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교사, 간호사, 보육종사자, 노인돌봄종사자, 테라피스트 등과 같은 유급의 형태로도 제공될 수 있다.

‘돌봄’을 서비스 제공으로 정의하면서 오는 불편함은 돌봄을 구성하고 있는 ‘동기’에 관련된다. 사랑과 정서적 활동이라는 특성은 금전적 동기나 경제적 효율성으로 설

명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이고 이는 특히 여성들에게 강력한 내면화를 가져오는 동기로 작동[29]하고 있다. '돌봄' 연구자들은 돌봄의 제공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돌봄 이용자의 행복을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이타적 동기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의 작위적인 구분을 통해 '동기'를 이해하자면, 돌봄 제공자는 도덕적 의무나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혹은 특정한 책임(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수혜자는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욕구를 실현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여기서 의존적인 존재는 노인이나 유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성인들도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의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상호의존적 존재로서의 돌봄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는 우리 사회의 생산과 재생산의 관계처럼 장기적인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적 과정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돌봄은 우리의 기본적 욕구의 일부로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것이며 남녀의 보편적 역할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향과 원칙론에 근거하여 현실사회에서 이러한 보편적 돌봄의 역할을 인정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무엇일가 제도적 맥락에서 유급과 무급의 . 돌봄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은 무급의 돌봄에 갇혀있던 여성주의 정치학이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무임으로 수행하는 노동의 모든 형태가 돌봄노동인가. 여성의 가족내 무임노동이 학문적으로 개념화된 것은 '가사노동'논쟁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해 여성주의 경제학자들은 '돌봄'의 가치가 국가의 경제와 회계 흐름을 이해하는 중요한 거시경제변수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고, 돌봄 경제로의 관심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윤자영, 2011). 돌봄은 가사노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통상적으로 '밥짓고 빨래하는'으로 분류되는 일상적인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보육이 개념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가. 일상적인 가사는 돌봄노동이 아니고 보육은 돌봄노동인가, 아니면 둘다 돌봄노동인가. 이와 관련해 돌봄경제학자들은 이 둘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를 돌보는 행위에 아이의 옷을 세탁하고 이유식을 먹이는 행위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29) 여성들이 아이들이 아플 때 돌봐야 한다거나 직접양육을 위해 직업을 중단하는 사례 뿐 아니라 교육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위해 노동시장을 떠난다는 사례들은 여성들에게 이러한 돌봄의 확장적 내면화가 보다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로 설명된다.

비임금노동 전체를 돌봄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돌봄노동은 “의존자 즉 이용자의 상태를 좋아지도록 하는 개인 대 개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으로 정의하는 한에 있어서 그 노동의 특성이 여타의 시장노동과 달리 정서적이고 애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존자가 아닌 일반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제조의 노동과정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할 경우 이를 모두 돌봄노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30] 돌봄을 상호관계적이라고 언급하는 특성에는 정서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돌봄의 제공자와 이용자는 정서적 개입과 관련하여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가.

돌봄 행위는 ‘변화효과(trensformative effect)'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변화효과는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이 더욱 자상하고 배려넘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효과이다. 이러한 효과는 자신이 돌보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유대나 애정이 발생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신을 매우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이 돌봐드리지 못한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 작동하면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을 취소할 수 없는 심리적 상태가 되고 이러한 상태의 지속을 통해 자신의 특성이 변화해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다. 영아나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가 화장실도 가지 못하며 저임의 돌봄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이 일을 지속하는 이유를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서‘라고 답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태가 돌봄의 질을 위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돌봄 제공자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며 심리적 보상 못지 않게 취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로 전락시키며 소진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돌봄이라는 노동의 특성인데 이는 돌봄 이용자에게서도 나타난다. 돌봄이용자들은 정서적 관여를 바라지만 이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를 가진 권력이 없는 약자들이어서 욕구의 결정에서 배제되기 쉽다. 그리고 정서적 개입과 개인적 접촉의 강화가 반드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데 특히 정서적 접촉이 강화되면 될수록 이는 대체가능성을 제약하게 된다 그리고 이용자의 .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돌봄의 질을 판

30) 우리는 종종 판매직이나 서비스직의 노동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적 투입을 감정노동으로 개념화하면서 이를 모두 돌봄노동으로 혼돈하게 되는데 이는 일상적인 서비스 노동이며, 돌봄노동과 같은 의존자 혹은 이용자의 상태를 좋아지도록 하는 노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어려운데 예를들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개인교사는 학습이라는 실제적인 노동행위보다 함께 놀아주는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점차 많은 돌봄노동이 상품화되고 있거나 사회화되고 있다. 그러나 돈은 정서를 살 수 없는데, 점차 상품화되고 있는 돌봄노동에 대해 정서와 감정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봄'이 유급화와 무급화의 형태로 각각 분화의 길을 걷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돌봄을 동기에 의해 규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돌봄노동 혹은 돌보는 행위의 과정에서 정서적 개입과 도덕적 의무에 대한 강조는 돌봄 제공자를 더욱 억압하며 동시에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2) 돌봄의 범주화에 따른 차이

20세기 후반까지 돌봄은 정책 아젠다에서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주제였다. 그러나 출산율의 하락과 여성의 취업증가 그리고 고령화라는 사회적이고 인구학적인 환경의 변화는 돌봄의 개인적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복지국가의 재구성에서 공적인 제공을 재구조화했다. 돌봄과 연관된 사회서비스 정책은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존자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다음의 〈표〉는 이러한 이용자별 직접적 돌봄노동이 시장과 가족을 통해 제공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의 복지국가와 돌봄 논의는 주로 보육을 중심으로한 사회서비스와 가족정책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돌봄'에 대한 정의는 자녀에 대한 돌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보다 포괄적이다. 데일리(Daly, 2001)는 '돌봄'을 "환자, 의존적인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의존자를 돌보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

돌봄을 사회정책의 틀에서 정책도구로 위치지우는 전제를 갖고 있을 때 노인이나 환자 혹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아동에 대한 돌봄의 접근과 차별화되는가 아닌가. 우리는 보육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련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그것은 탈가족화 혹은 가족화의 방식으로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정열이었다. 이는 여성의 고용과 취업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상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통한 공공성 증대, 서비스의 질관리와 보육료 상한선과 보편적 보육서비스 확대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

우개선을 포함한 좋은 일자리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다(송다영,2011). 또한 가족책임주의에 대한 논의는 아동 돌봄과 관련한 이러한 공공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직접 아동의 돌봄을 책임지려는 요구의 변화는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한다(윤홍식,2011). 그렇다면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환자에 대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는 공공성의 강화를 통한 탈가족화를 지향하는가, 가족책임주의에 갇혀있는가.

〈표〉 이용자별 제도적 맥락에 따른 직접적 돌봄노동의 예

	아동	노인	환자, 장애인	성인(타인)	성인(자신)
비임금 가족노동	수유, 말하기 또는 놀아주기	식사, 목욕, 편안함	식사, 목욕, 편안함, 의료적 관리	카운슬링, nurturing	방문의사 체육활동
비공식 시장노동	보육, 탁아, 가족데이케어제공자	돌봄도우미, 유급친구	가족건강케어 제공자		
임금고용	보육교사, 교사,	노인케어제공자, 노인심리학자	간호사, 간호보조, 의사	카운슬러, nitritionist 요가지도사	

자료: Folbre "conceptualizing care",p.105

확대가족 혹은 대가족제도가 붕괴된 이후 핵가족 중심의 사회에서 아동돌봄이 가족의 주요한 돌봄노동을 구성했지만 노인 돌봄은 가족화 방식으로 제도화되지는 않았다. 보육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속적 고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노인돌봄은 이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분석되거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가족내 돌봄의 주 담당자가 여성이라는 인식이 변화되지 않은 채,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노인 돌봄의 필요와 서비스 제공은 적지 않은 가족내 갈등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가족주의의 두 얼굴은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아동돌봄의 가족화는 탈가족화 못지않게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돌봄의 가족화는 그렇지 않다. 돌봄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왜 발생하며 이는 여성이슈가 될 수 있는가. 인생사적으로 누구나 진입하는 노인

의 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돌봄의 형태로 우리는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선호하는가, 급여 중심의 서비스를 선호하는가. 노인 돌봄의 제공자인 여성들은 어떠한가.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회적 돌봄의 형태는 가능한 한 오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시설에서의 돌봄은 그룹홈 혹은 시설을 주거지원 형태로만 파악하는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가능한 재가 즉 홈케어의 형태를 지향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환은 '독립'을 위한 장애인 단체의 로비를 반영하기도 하였으며, 주로 여성인 돌봄의 제공자보다는 노인이나 환자 등 돌봄의 이용자 혹은 사용자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돌봄노동이 사적영역의 여성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사회정책의 틀에서 어떻게 사회적 지원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를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운거슨(Ungerson, 2000)은 돌봄 사용자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돌봄 제공자를 고용하는 '돌봄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care)'를 개념화했다. 돌봄서비스의 현금(cash for care)지급계획은 돌봄의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우회임금(routed wages)'이다. 노인을 대상

으로 한 현금지급시스템 즉 노인돌봄의 상업화를 연구한 운거슨(Ungerson, 2007)은 이러한 서비스의 딜레마와 모순에 대하여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인다. 즉 현금지급계획의 이데올로기적 중심은 소비자중심주의에 있지만 보다 실제적인 가치는 비용의 억제라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비용축소 경향은 현금지급을 통한 재택서비스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첫째, 주거비를 이용자에게 부담케하고 둘째, 가정이나 가족 그리고 혈연을 둘러싼 정서와 의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친척의 고용은 비용억제를 진작시키고 비공식적 돌봄을 강화하고 온존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고용비용과 관료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복지국가가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것은 사회적 돌봄의 비용을 억제하거나 감소하려는 대책의 일부이다 현금지급을 통한 가정내 돌봄의 권장은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의 고용과 지불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공급을 확대하지만 이는 보다 가난한 친척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등 취약한 노동의 착취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운거슨(Ungerson, 2007)은 영국 사례에서 서비스가 아닌 현금지급을 통한 돌봄서비스가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키며 이러한 정책 때문에 돌봄 노동시장 역시 시설

에서 일하는 자격을 갖춘 적법한 유급의 돌봄 노동자와 개인적인 돌봄 이용자가 대충 고용한 돌봄 노동자로 양극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돌봄 노동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다. 결국 현금지급은 여성 돌봄노동자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일 수 있다.

5. 복지국가의 여성과 여성'들'

1) 돌봄노동에 대한 지불의 문제

'돌봄'은 가부장적 성별분업 구조에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면 '돌봄'을 둘러싸고 여성들은 단일한 이해를 구성하고 있는가. '여성'이 하나의 보편적 주체로 등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성운동의 세계적 확산과 포스트구조주의에 힘입어 여성들간의 차이에 주목했다. '여성'은 더 이상 단일한 주체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여성들간의 차이는 그들의 존재론에 기반하고 있다. 여성들은 국지적으로 맥락화된 억압에 노출되며 이에 대한 상이한 문제의식화와 대응이 존재한다는 여성들간의 차이에 기반한 여성주의적 사유와 실천에 대한 언급은 애드리안 리치(Adrienne Rich)로부터 연유하여 현장여성주의(locational feminism)로 명명된다(이상화, 2004). 이러한 현장(location)은 가부장적 성별분업 구조하에서 노동시장안에 존재하는 여성과 노동시장 밖에 있는 여성 즉 여성임금노동자와 전업주부로 구분된다. 복지국가의 탈가족화가 여성에 대한 획일적인 탈상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내지 가구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복지급여, 삶의 형태와 무관한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및 그안에서의 차별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지적(엄규숙, 2004)은 돌봄에 대한 지원과 사회화가 여성들간의 차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돌봄'을 둘러싼 여성들간의 차이를 여성노동의 유급노동 참여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가족 간의 돌봄 노동을 지불노동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할 것인지는 복지국가 설계에서 여성들의 주체화와 긴밀한 연계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의 유형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payment) 혹은 수당(cash)을 쟁점으로 하여 '임금노동자: 돌봄노동자' 혹은 '노동중심 일원론" 가족/노동 이원론'(Orloff, 2001)의 방식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혜경, 2004). 스탠딩(Standing, 2001)은 여성주의자들이 접근하는 돌봄의 두가

지 방향을 첫째, 프레이저(Fraser, N)가 말하는 '보편적 부양자 모

델'로 국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는 것과 둘째, '돌봄제공자 등 가모델'로 돌봄 제공자에 대한 보조금을 통해 비공식적인 돌봄노동을 합법화하고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언급한다.

이인소득자모델을 제도화한 사회민주주의 복지레짐이 보다 성평등적이라는 개별 국가들의 경험은 돌봄노동에 대한 급여화가 여성의 성별분업 강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 밖의 여성들, 즉 전업주부의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은 동질적으로 보기 어려운 여성의 차이를 보여주며 연대의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보살핌의 경제적 보상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온 운거슨(Ungerson)은 집에서 수행되는 일에 대한 보상 혹은 임금 형태로서의 현금지급은 돌봄과 시민권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 중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특히 여성의 지위가 다양해지고 내부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정책적 수요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은 여성들간의 차이를 간과하는 접근이라는 것이다.(Ungerson, 2000; 김혜경, 2004 재인용). 하지만 운거슨(Ungerson)도 점차 유급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돌봄에 대한 급여가 성별분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주부화를 가져와서 여성들간의 계급적 차이를 증대시킬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이슈가 '돌봄 제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주의 쟁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자녀양육수당에서 발견된다. 아직은 그 규모와 수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가져올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차후 양육수당 지급범위를 넓히고 비용을 증가시켰을 경우 저소득층 여성들은 돌봄의 탈가족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거나 노동시장에 머물기보다 자신의 돌봄노동에 대한 지불의 형태로 양육수당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돌봄노동에 대한 지불 혹은 보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논의의 촛점은 사회서비스 확충이냐 돌봄의 지불이냐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논자들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이를 위한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의 균형적인 복지혼합구조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점은 노동시장 밖의 여성들이 여전히 가족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돌봄에 대한 문제이다. 돌봄은 임금노동자이거나 전업주부이거나 모든 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임금노동자 중심적 접근은 탈가족화를 통해 접근되고 있지만 전업주부의 돌봄노동에 대한 접근이 그들의 노동력 상품화를 위한 방향으로 기능할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임금노동자 중심적 접근이 일 중심사회의 패러다임이라는 비판에는 우리 모두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며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사회의 주요한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로의 지향을 내포한다. 도덕과 윤리로서가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담을 수 있는가. 바람직한 성평등 사회는 돌봄을 무급의 여성 일방에 의해 사랑과 헌신과 의무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돌봄의 책임을 인식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직이나 사회보험도 다시 설계되는 사회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내 돌봄노동 제공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부여와 연관된 가능한 언급들은 다음과 같다. 키테이(Kittay)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가 관계의 순환속에 돌봄 관계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조직화된 사회며 이러한 사회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공적인 사회제도를 통해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국가는 첫째, 수당 형식의 보상 둘째, 사회보험 등 사회정책 수급권 형태의 사회적 기여 인정 등의 방식을 제안한다(마경희, 2010). 엄규숙(2004)의 고민은 보다 구체적인데 복지국가 성격 및 특성에 대한 논의에 젠더 관점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개별 제도의 투입-산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제도 또는 정책 자체가 가지는 젠더 장벽이나 몰성성에 대한 연구, 정책 대상의 정의 내지 표적 집단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연구와 복지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충족 또는 무시되는지, 같은 성 안에서 존재하는 차이를 복지제도가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젠더관점에 입각해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언급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재분배와 여성의 이중적 역할지향을 지원하는 장치의 마련을 주장하며 특히 사회복지제도의 급여수급자 모델에서 개별모델이 확산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추측컨대 노동범주의 재구성을 통해 접근하는 개별모델은 무급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기초로 수급권이 인정되는 제도의 설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주의 진영에서 최소한으로 동의되어야 할 부분은 남성정규직임금노동

자 중심의 사회보험 설계에 대한 재편이라고 본다. 이 재편에는 비정규직, 시간제 그리고 무임의 가사노동을 포함해야 한다.

돌봄 제공자 특히 무임의 돌봄노동이 수입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스탠딩(Standing, 2001)에게서 보다 뚜렷하다. 돌봄 노동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될 것이며 돌봄 노동을 할 권리가 ILO의 "괜찮은 일자리" 전략에 통합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직업안정성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국가는 수입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적 접근, 공공부조적 접근 그리고 시민권적 접근의 3가지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스탠딩은 시민권적 접근을 제안한다. 즉 국가는 돌봄을 받을 권리와 줄 권리를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돌봄 노동을 하는 동안 박탈된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보편적 인권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수당에 기초한 접근(allowances-based approach)을 하는 것은 그동안 노동력 통계와 국가 수입회계에서 무시되어왔던 돌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러한 주장이 현대판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를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대부분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의 성별분업이 강화된다면 이는 불평등을 강화할 것이고 여성은 가장 열악한 사회계층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성별분업과 여성시민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이나 한국사회의 복지담론 및 여성주의 진영에서 배제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과 '사회임금(Social wage)' 논의이다. 간략히 개념을 소개하자면 '기본소득'은 '각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불될 것이 보증된 소득'이며 여기서 '무조건적'이라 함은 소득수준이나 성별, 고용상태, 결혼여부 등등에 관계없이 조건없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사회임금'은 "국가가 국민이나 기업에서 거둔 돈을 현금이나 서비스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이러한 형태로는 국민연금,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보육지원금, 건강보험급여 등이 있다.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순수하게 실현하고 있는 개별국가는 없으며, 사회임금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복지국가일수록 사회임금이 높다.[31] 시장임금에 대비되는 사회

31) 사회공공연구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사회의 가구당 평균 사회임금 비중은 약 15%다. 2000년 중반까지 가구당 평균 7.9%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8%가 채 안되던 2000년대 중반통계만 보아도 OECD 국가의 사회임금은 평균 31.9%다.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나는 '16.9%'포인트의 갭은 모두 가계 부담이다. 노후와 질병대비, 육아 비용 등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은 그만큼

임금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것은 사회지출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능하며 이는 복지제도의 설계에서 현금과 서비스를 통해 개별 가계로 돌아오는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사회의 소득재분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임금이 여성에게 돌아오는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별제도별 분석은 미흡하다.

"일하지 않는 자에겐 복지도 없다"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중심 패러다임에서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조건만으로 어떤 심사도 없이 일정한 소득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은 일면 매우 매력적이다. 자산중심의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복지를 문제삼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보편주의의 가장 극단적 형태로 간주된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 출발점은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이 노동시장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또는 타인의 임금소득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적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일정한 물적 조건이 제공되는 사회'라는 데에 있다(Van Parijs, 2000). 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 진영의 논의는 여성의 부불 돌봄노동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갖게 되어 여성들의 취업의욕을 저하시킬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성별분업을 합리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과 기본소득은 비로소 돌봄노동을 그 자체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시민적 활동으로 '인정(recognizing)'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의 시장노동에의 의존도를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별분업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기본소득'[32]의 성평등적 전망에 대한 검토(윤자영, 이숙진, 최성애, 2010)는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시민에 기초한 기본소득이 여성주의 시민권의 민주화에 기여(Patemann, 2004)하며, 시민권의 핵심적 자격요건이 돌봄수행이고 이는 남녀 모두의 기본적 시민적 역할로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프레이저(Fraser)의 돌봄수행자 모델에

의 사회임금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재정 크기 자체가 작다. 2010년 기준으로 28.1%인데 OECD 평균 44.6%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여기에다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 19%의 반도 안되는 9%에 불과해 사회임금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2011. 5. 12일자)

32)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내용을 개괄하자면, 연령(19세 미만 인구는 부모에게 지급)에 의해서만 차이가나는데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전제하고, 기존의 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과도기를 설정하되 궁극적으로는 연금 및 현금지급형 사회보장비를 통합하는 것으로 설계된다(강남훈, 2010). 2009년을 기준으로 연간 250조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논의 참조 2010).

적합하며, 이러한 새로운 시민권 개념에 근거한 분배적 정의원칙(Zellek)을 실현하는 기본소득이 임노동주의의 젠더적 편견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은 '기본소득'이 성별분업을 강화할 것인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저해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여성이 무급 노동에서 해방되어 남성과 동등하게 임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의 올바른 해법으로 보는 버그만(Bergmann, 2004)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20세기 후반의 근50년간 여성들이 이루어온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임금에 대한 진보를 거스르는 것이 된다며 이를 반대한다. 그러나 맥케이(Ailsa McKay, 2007), 제레크(Almaz Zelleke, 2008) 그리고 페이트만(Carole Pateman, 2004) 등은 결혼, 고용 그리고 시민권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이 주는 여성주의적 함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본소득이 여성의 노동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이 안된 이론적 주장일 뿐이며 이는 지극히 남성중심적이며 일과 임금 , (work and pay)에 대한 전통적인 패턴에 의거한 분석일 따름이라는 것이다[33]. 실제로 여성들은 더 낮은 지위로 노동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강요를 받지 않으며,일하고 생활하는 방식(the way they work and live)에 있어서 더 다양하고 독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인한 여성들의 협상력 강화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의 제한을 가져옴으로써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주변화, 저지위·저임금화를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 특히 여성주의에서의 지지는 노동/비노동의 이분법과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복지의 모든 행위가 임노동 세계에 집중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 이유는 여성이 비임금의 돌봄노동 수행자로서의 부담과 역할에 기인하여 부차적 노동자로서 저임금, 저지위의 노동 조건을 감내해야 하는 여성의 임금/비임금 노동(work)의 상호작용적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특히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에

33) 일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기본소득' 제도가 노동유인을 줄여서 경제성장을 저해하거나 효율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강남훈(2010)은 미국, 캐나다, 알래스카, 브라질, 나미비아의 경험적 증거로 이를 반박한다. 소득보장이 대규모의 노동유인감소효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나미비아의 경우 실업률 감소를, 브라질의 경우 지니계수 감소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론적으로는 전통적, 조건적 복지제도보다 기본소득제도가 노동유인 감소효과가 작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은 임금비용 보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소득보조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보조되기 때문에 대체효과의 위험이 없으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실업자들의 파트타임 노동 탐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참여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숙련 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유보임금을 높여 자본에 대한 협상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소득보장을 위해 남녀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지 않게 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가져오고 이는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상당부분은 가정에 기초해있다. 성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지 성평등에 기여할 것인지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면 매우 비현실적 논의이기도 하다.

그러나 '가치'만 있고 '가격'은 없는 돌봄노동에 대한 대안이 여성만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은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통적인 노동과 비노동, 생산과 비생산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과정을 통해 무급돌봄노동이 생산적인 활동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우리의 경제사회패러다임의 변화 및 특정한 조건을 전제한 치밀한 설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34)]

'기본소득'이 보육과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의 사회화 혹은 집단주의적 방식을 통한 국가복지의 실현을 추구하는 복지국가 설계에 있어서 개인별소득의 지급방식은 재정과다와 더불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의 소득지급을 통한 복지추구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전달체계 확립에서 창출될 수 있는 공공의 좋은 일자리를 시장에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복지학계는 이 지점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며, 상대적으로 국가-시장의 균형점을 추구하는 경제학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명백히 한국의 현실은 국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요구하고

34) 성별분업의 강화 혹은 여성의 전업주부 선택이라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기본소득의 도입에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노동을 전제한 노동연계복지와 연금제도의 철폐를 동시에 추진할 때만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시장노동과 동일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 활동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둘째, 기본소득의 책정시 의존자의 필요를 반영하여야 하는데 예를들어 어린 자녀일수록 물질자원 만이 아니라 시간자원이 필수요소이고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낮은 기본소득이 설정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존자의 필요 생계비를 제대로 책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조건은 기존에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왔던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완전 지원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의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의 역할, 보편적 복지 공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애기하듯이 기본소득의 도입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의 강화와 연계되지 않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은 우려하는 바대로 성별 분업을 강화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에 내재한 가치의 전복은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점진적 가능성을 시험받을 것이라고 본다.

2) 여성 계층의 양극화와 돌봄

여성주의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의 변화 때문인데 그것은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여성 역할의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돌봄에서의 지배적인 역할은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복지국가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주요한 인구학적 변화도 있다. 그것은 첫째, 비전형적인 가구, 여성 한부모가구, 단독가구 등의 증가로 세대간의 관계보다 같은 세대 성인들 간의 개별적 관계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돌봄의 형태도 계약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가지며 각기 다른 욕구를 가진 다른 형태의 가구인 동성애커플, 고령자혼인커플, HIV/AIDS 감염가구 등의 증가, 둘째, 특히 여성노인이 많은 고령화의 진행, 셋째, 글로벌한 돌봄 체인을 형성하는 이주의 증가 넷째, HIV/AIDS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책임으로 남은 부모 없는 아이의 증가 등이다. 이러한 인구학적 특성은 각기 다른 차이와 욕구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통한 돌봄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변화하는 여성 역할과 지위의 핵심은 무엇인가.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전통적 분리로부터 여성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시장경제로의 편입, 임노동자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가족/여성-시장/남성의 구도로 본다면 여성의 '남성화(임노동자화)'로 설명된다. 그리고 돌봄의 부재 혹은 재분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는 것 중의 하나는 여성의 '남성화'는 놀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남성의 '여성화(돌봄수행자)'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족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는 전혀 새롭지 않다. 이러한 성별분업의 경로가 야기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은 시장을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복지국가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개입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간의 계층적 차이와 돌봄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는 각 부문의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이러한 불평등의 한 축

을 여성이 지고 있다. 보다 낮은 임금과 낮은 지위의 비정규직에 여성 임노동자의 64.9%가 몰려있고, 여성 임노동자(정규직+비정규직)의 26.4%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김유선, 2009). 여성의 빈곤화는 남성과 여성의 격차를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성집단 내부의 격차를 설명하는 지표[35]이기도 하다.

통상적으로 여성의 낮은 교육수준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지위를 결과한다. 이는 결혼행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에서의 교육동질혼은 2003년 전체 결혼의 55%를 차지해서 196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며 배우자도 동질적이게 되므로 이는 고용상의 동질혼을 결과하게 되는데 이로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보다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2003년 경제적 동질혼이 미국사회 불평등을 약13% 증가시킨다고 보고했다. 동질혼의 증가는 계층이동성이 낮아짐과 동시에 계층간 격차가 심화됨을 의미한다. 저소득 여성들은 저소득 남성과 결혼하게 되며 이들의 가족내 돌봄은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2009)은 여성 역할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가족내 성평등 균형은 고학력층에서만 유리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불안정한 성평등 균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여성 역할의 불완전한 혁명(incomplete revolution)에 좀더 천착해보면 이는 첫째, 가정에서 정체된 혁명 둘째, 혁명의 계층화이다. 에스핑-앤더슨은 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단하나의 기본적인 선호가 있다면 그것은 강한 모성추구라고 보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할수록 일과 모성의 조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긴장을 이루게 되며, 결국 여성역할의 혁명은 복지국가의 도움이 없다면 달성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여성의 남성화가 진행되는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성 역할의 혁명이 불완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여성 내부의 양극화 진행이다. 특히 점차 증가하는 동질혼이 일하는 여성 내부의 계층적 차이를 심화시켜서 부자가구와 가난한 가구로의 이분화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더욱 불평등해지는 것을 결과한다. 최근 신명호(2011)는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를 통해 부모의

35) 여성빈곤화 산출에 있어서 이러한 구분이 분모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종종 섞여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평등이 자녀 세대의 학력자본 불평등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주목한다[36]. 이러한 불평등은 인적자원의 불평등한 재생산을 가져오며 결국 저출산 사회에서 불균등한 인적자본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교육수준이 높은 고소득 계층은 자녀에게 과잉투자하는 경향을 갖지만 저소득층은 반대의 상황이 되는데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평생고용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여성 역할의 혁명은 미완성으로 남아있고 그런 측면에서 소득분배상 하위에 있는 엄마의 고용지원 역시 복지국가의 주요한 역할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높이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을 줄임과 동시에 양육투자에서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그런 면에서 복지국가가 설계해야 하는 주요 여성 아젠다이기도 하다.

에스핑-앤더슨(2009)의 논의는 가구 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소득층 여성들은 성평등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저소득층 여성들의 상황은 오히려 나빠지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생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불평등의 격차가 적은 곳, 즉 스웨덴처럼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은 곳이 성평등의 균형에 도달하는 복지국가 유형임을 보여준다.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일과 가정에서의 진정한 성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진행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특정 계층 여성의 성평등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렇기위한 복지국가 유형은 양육에 대한 투자가 계층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에스핑-앤더슨의 논지이기도 하다. 양육에서의 불평등이 여성 계층의 양극화와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는 가장 절실히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과 지속적인 고용을 위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여성들간의 계층적 차이가 확대됨으로써 나타나는 돌봄의 불평등한 재생산을 막기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젠더관점의 사회정책인 것이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여성들간의 계층적 차이를 좁혀가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quality)에 집중해야 한다. 돌봄일자리의 질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36) 이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 중산층이 교육에 개입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관행은 강한 학벌주의 가치관, 학업열의를 높이기 위한 일상적 의식화, 조기에 공부 습관 들이기, 학업에 몰입시키기 위한 각종 생활통제, 학업 전술 및 진로 선택전략의 수립(사교육 정보 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저학력 노동자층의 교육 관여 및 양육관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무관심하며 자녀교육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항상적으로 비슷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임금, 노동시간, 직업안정성, 노동조건 등 모든 영역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일자리에 여성이 몰리는 것은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한 축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순영(2009)는 돌봄 일자리가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의 연장선상에서 낮게 평가되어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임금과 낮은 지위를 결과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지적 역시 다수의 저작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성별직종화의 강력한 현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스웨덴과 같은 모형이 차선이라는 지적이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일자리로의 전환하거나,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부담수준을 현실화하여 서비스의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해 나가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나가는 말

여성주의 진영에서 복지국가운동을 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복지국가가 성평등을 담보하기 때문일까. 아니다. 복지국가가 자연스럽게 성평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담보하는 복지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복지국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평등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돌봄의 지원유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향할 것이다. 급여보다는 서비스를 확충하고, 사적 부문에서보다는 공적 부문을 확대하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고려해서 좋은 돌봄서비스(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잔여적이고 선별적이기보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돌봄을 선물이나 도덕으로 보는 것은 돌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자유는 노동자와 시민집단에 의해 향유되는 것과 같은 권리이며 이를 최대한 공적 부문에서 서비스화하고 탈성별화를 통해 재분배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일 것이다.

이인소득자모델을 위해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국가 유형인 노르딕 모델에서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서비스를 가족에 맡겨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는 2가지 이유에 근거한다(Andersen, T. M. etl, 2007). 하나는 서비스 제공자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의 특성상 가족내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점점 더 요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노동공급과 세금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규모의 경제인데 예를 들어 네 가족이 있는데 1명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각각 1명이 가족에 있어야 하는 경우와 4명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1명이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를 보면 후자의 경우 3명은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는 실질적 이해가 있다는 점이다. 공적 부문에서의 보육과 노인돌봄은 특히 여성의 노동공급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노르딕 국가들이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용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서 돌봄을 사적 가족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공적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압박이 있더라도 그것을 풀기 위한 방법이 공적인 서비스의 사적 영역으로의 이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여성주의는 성평등 복지국가를 위한 정책목록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돌봄 제도화의 방향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의 각 영역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선택하고 돌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탈상품화, 탈가족화, 그리고 탈성별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인숙.정재훈(2008), 여성복지실천과 정책, 나남

김은실(2011),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통해본 노무현 참여정부의 실험성: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의 경험

김혜경(2004), "보살핌노동의 정책화를 둘러싼 여성주의적 쟁점: "경제적 보상(payments for care)"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2호.

마경희(2010), "일 중심 사회에서 돌봄사회로: 성찰-상상-실천", 2010제주인권회의

엄규숙, "젠더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원숙연(2003), "젠더와 국가정책의 역학;젠더-정책레짐 정립을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2호

윤자영(2011), "사회재생산 위기와 복지국가", 한국사회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윤자영.이숙진.최성애(2010), "기본소득과 성평등", 2010제주인권회의

이상화(2004), "지구화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차이의 존재론과 공간성의 사유", 한국여성철학 제4권

이숙진(2011), "국가페미니즘의 형성과 그 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계승과 발전,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싱크탱크 네트워크 창립대회 및 기념 심포지엄

조흥식 외(2006), 여성복지학, 학지사

Dalreup, D.(1989), "개념의 혼돈-현실의 혼돈:가부장제 국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과 국가-국가정책과 여성의 공사영역의 변화, 한국여성개발원

Andersen, T.M. etl.(2007), The Nordic Model : Embracing globalization and sharing risks, The

Research Institute of the Finnish Economy(ETLA): Taloustieto Oy

Daly, M(2001), "Care policies in Western Europe"

England P. & N. Folbre( ), "Contracting for Care" in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ed. by Mary Daly, ILO

Esping G.-Andersen(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Polity Press.

Lewis, J.(2001), " Legitimizing care work and the issue of gender equality", in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ed. by Mary Daly, ILO

Standing, Guy(2001), "Case work: Overcoming insecurity and neglect", in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ed. by Mary Daly, ILO

Ungerson, C. and S. Yeandle(2007), Cash for Car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Palgrave Macmillan: NY.

4

여성노동, 감정을 말하다!
신자유주의 문화정치- 여성의 일, 감정, 그리고 인격

권수현 |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

첫 번째 지도. 신자유주의 문화정치 VS 탈-신자유주의 정치학

1. 신자유주의란?

1) 정치경제적 측면 :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하여 '자유 시장'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경제학 이론. * 자유방임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경제학 -〉 신자유주의 경제학, 경제적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주장: 작은 정부 + 자유방임시장

-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그 역할을 치안 및 질서 유지에 한정하는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 doctrine)가 '경제적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주요 골자다. 이 이념을 계승하여 고전 경제학의 '자유 시장'과 '작은 정부'의 원칙을 복원할 것을 주장하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혹은 '경제적 신자유주의'다.

○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국가: 미국(레이거노믹스), 영국(대처리즘)

○ 시기적 구분: 1970년대 전후

- 케인즈적 자본주의(착근된 자본주의 embedded capitalism) -〉 신자유주의 (하비)

- 생산자 사회 -〉 소비자 사회

2)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과 비판

○ 신자유주의의 신화와 현실: 역사적 관점 (장하준, 데이비드 하비)

○ 자본 축적 양식의 변화: 산업자본주의 재화의 생산과 교환 vs 탈취에 의한 축적 (하비)

○ 탈취에 의한 축적이란? 다수의 희생을 대가로 소수가 이익을 얻는 시스템. 계급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획.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성과는 신자유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이윤 축적의 증가가 아니라 "특정 계급에 부를 집중적으로 재분배"하는 것

- 특징: 민영화와 상품화, 금융화, 위기의 관리와 조작, (특정 계층에 부를 집중적으로 재분배하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

○ 신자유주의화 과정

1) 시장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적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이식 (하비, 클레인, 장하준)

2) 대중의 동의와 상식에 기반 (하비)

3) 신자유주의적 국가: 공포와 불안의 문화, 규제 권력의 강화

3) 신자유주의의 문화논리

질문1. 청년층 여성들은 왜 부당한 성차별에도 항의하지 않을까?

질문2.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중에는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왜 "내가 틈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까?

질문3. John Kenneth Galbraith: 민주 국가에서 다수 유권자들이 사회 불평등의 증가에 거리낌 없이 투표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상황1.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만 18세~33세의 미혼(비혼) 청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의 23.1%, 취업자의 12.3%가 취업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 조사 결과에서 만 18세~33세의 미혼(비혼) 청년층 여성들은 대부분 노동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겪더라도 참고 견디거나 일자리를 포기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아르바이트 학생의 경우엔 68%의 학생들이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거나 그냥 참고 견뎠다고 응답했고, 취업자의 경우엔 84.5%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그냥 참고 견딘다고 응답했다. 고용주에게 항의한 경우는 아르바이트 학생과 취업 여성 각각 10.6, 5.2%에 불과했다.

그림33. (학생) 아르바이트생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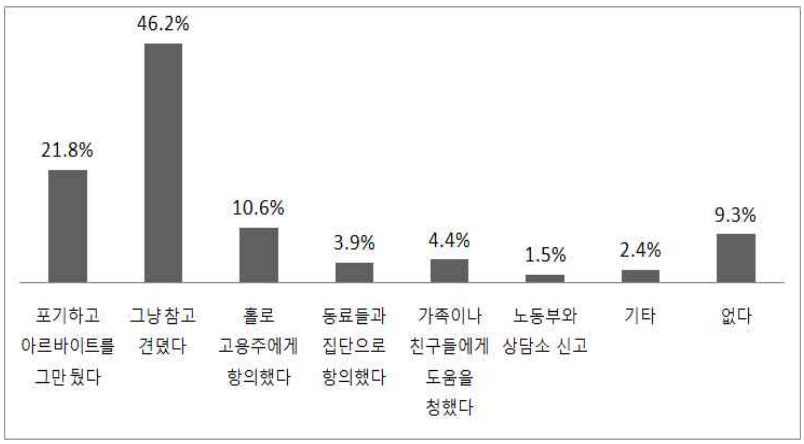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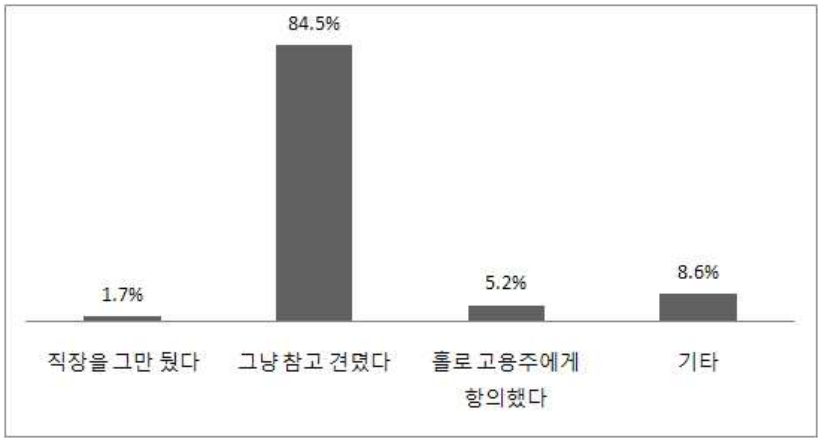


그림34. (취업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경험 후 대처 방법



○ 신자유주의 문화 규범

- 경쟁-자유, 행복-돈, 대박 정신(경쟁과 승자 독식)
- 자유는 개인의 노력+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따른 인간성의 변화

1.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The Corrosion of Character)(리처드 세넷)

1) '인지적 불협화음(cognitive dissonance)'

-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에서 그는 '다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 가능한 자아(sustainable self) 의식을 간직하는 인간성의 특징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부당해고와 노동착취 등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보수적인 심성을 갖게 된다. 그것은 이 위기 속에서 '자아의 일관성 혹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 급속한 이익 실현을 바라는 이른바 '조급한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의 성격(character)

- 인지적 불협화음: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주의력은 멀리 내다보기 보다는 임박한 환경에 고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집중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의미 파

악에서 갈등적 심리 상태를 뜻하는 '인지적 불협화음'이라고 부른다.

-〉 개인의 능력으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는 우애와 평등, 신뢰라는 인간성이 심하게 훼손됨.

-〉 급속한 이익 실현을 바라는 이른 바 '조급한 자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고, 노동자들은 자신이 남의 노동에 기생해서 먹고 사는 신세가 아니라는 것(기생충 이데올로기)을 보여줘야 한다. 신경제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늘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인간형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상품의 신뢰 수명이 짧아진 만큼 인간의 자기 신뢰나 인간 간의 상호 신뢰의 수명은 더욱 짧아질 수밖에 없는 것

2. 소비자 시대에 가난하다는 건 범죄다 (지그문트 바우만)

- 오늘날 노동윤리는 '의존'이란 개념을 불명예로 전환시키는 도구이다. p158

- 생산자 시대의 노동윤리에서 소비자 시대의 소비미학으로

- 근대가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이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핵심 규범이었던 '노동윤리'가 지금은 가난을 범죄화하고 탈정치화하는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공공성을 해체하고 복지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작은 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영화의 필연적 결과인 빈곤을 비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소거하기 위해 규제 권력(policing power)을 키우는 '큰 정부'라는 것. 여기서 바우만이 주목하는 건 '빈곤'에 대한 내러티브, 즉 '극빈층', '가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사학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2. 탈-신자유주의 정치학이란?

1)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것, 이것이 대세다?

- 경제적 다양성의 지도: 자생적 경제 vs 의도적 공동체 경제

- natural economy vs intentional community economy
- 필리핀의 자그나Jagna 지역에서 지방자치정부와 함께 진행한 'MSAI 프로그램'
-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 인도 마라리큐람 Mararikulam 저축 공동체
- 제주 올레길: '고용-생산-소비-재투자'의 순환 고리
- 미국의 '병렬 조직parallel institutions', 네덜란드 일자리나누기
- 영국의 '동네 재생(Neighbourhood Renewal)' 프로그램

2) 이념적 도전: 노동윤리에 갇힌 인간성?

예) 국가의 역할: 기본 소득 보장제도, 누진소비세

- 소득자격과 소득확보능력을 분리하자

* 클라우스 오페: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설득력있는 방법 제시. ↓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개인의 소득 자격이 실제 소득을 벌어들이는 능력과 다를 수 있다'는 개념이 있다. 노동윤리 시대에 임금노동을 중시했던 것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기본자격부여basic entitlement와 기초보장basic guarantee이라는 전제로 관점이 변화하고 그 실현이 뒤따른다면 이 해결책은 실현 가능하다. (바우만, p213)

[참고 문헌]

김현미 외,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이후, 2010.

김수현·손병돈·이현주, 「한국의 가난: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간략한 역사』, 한울아카데미, 2007.

리차드 세넷, 유병선 역, 『뉴캐피털리즘-표류하는 개인과 소멸하는 열정』, 위즈덤하우스, 2009.

리차드 세넷 저, 조용 역,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문예출판사, 2002.

유아사 마코토(2009), 『빈곤에 맞서다 -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검둥소.

지그문트 바우만, 이수영 옮김, 「새로운 빈곤: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퓨어」, 천지인.

Ehrenreich, Barbara eds., Global Woman -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Henry Holt & Co, 2004;

Gibson-Graham, J. K., 2006. A Postcapitalist Politics. the University of Minesota Press.

부록1. 부조리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의(injustice)이다!

Ehrenreich, Barbara eds., Global Woman – Nannies, Maids, and Sex Workers in the New Economy, Henry Holt & Co, 2004;

요즘 '정의'라는 화두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런 유례없는 현상은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부조리가 극에 달한 탓도 있겠지만,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도대체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 듯하다. 「글로벌 여성」은 정의(justice)에 대한 지적 갈망이 높아진 이 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책이다. 서구의 철학적 사유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바탕으로 한 책이기에 쉽게 읽힌다.

제목이 풍기는 학술적·전문적 분위기(「글로벌 여성: 신 경제에서의 유모, 가사도우미, 성노동자들」)에 비해 의외로 내용은 쉽게 잘 읽힌다(사회과학 서적 치고는 상당히 쉬운 영어로 씌어있다). 「감정노동」의 저자 앨리 러셀 혹쉴드, 「빈곤의 경제」의 저자 바바라 에렌라이히, 「경제의 세계화와 도시의 위기」의 저자이자 '글로벌 시티'라는 개념으로 널리 알려진 사스키아 사센 등 다수의 저명하고 명민한 저자들이 그들의 지적 통찰력과 학문적 성과를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뭉쳤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전혀 다르거나 지배 담론에서 가려진 '세계화'의 이야기, 이른바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서사를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그동안 주류 학계나 미디어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이주 여성들의 삶, 여성 노동의 세계화를 둘러싼 부조리한 국제적 노동 분업의 현실이다. '이주의 여성화', '보살핌 노동' 등을 주제어로 하는 이 앤솔로지 중에서도 앞에 언급한 3명의 저자들의 글이 제일 널리 읽히는 듯하다.

이중 혹쉴드의 논의만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혹쉴드(2장 "사랑과 금")는 신경제의 그림자, 비공식 섹터인 보살핌 노동 및 감정 노동에 종사하기 위해 제3세계의 여성들이 제1세계로 이주하는 현상을 '부드러운 제국주의' 혹은 '정서적 제국주의'로 명명한다. 예전에는 금이나 상아, 고무 등과 같은 자연 자원, 즉 물질적 자원이 주된 약탈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1세계가 3세계로부터 '사랑'이라는 정서적 자원을 착취하여 재분배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착취가 강압이나 폭력을 동원하여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조리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세계화로 인한 불균등한 발전과 이로 인해 더

욱 극심해진 국가 간 빈부 격차, 그리고 이것이 제3세계에 야기한 빈곤과 빚이기 때문이다.

세계화가 야기한 부조리와 그것의 비가시성 문제에 대해 혹쉴드는 보살핌 노동의 사용자-피고용인 사이에서 그 노동이 인식되는 방식의 차이를 조명함으로써 신랄하게 분석한다. 혹쉴드는 이주 여성 유모가 아이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노동 과정에서 소외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사랑의 페티시화'로 설명한다. 이주 여성 유모는 사용자(고용자)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로 '소비'될 뿐,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겪는 감정이나 보살핌 노동 과정의 어려움들은 간과된다. 1세계의 '있는 집 자식들'은 여러 명의 어른들(부모, 유모)로부터 듬뿍 사랑을 받는다. 이 아이들이 애정의 '과식'을 향유하는 반면 남겨진 3세계의 아이들은 정서적 결핍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 과정에서 상품이 생산되는 과정과 맥락이 무시된 채,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이 독립적인 대상으로 간주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페티시즘. 혹쉴드는 이 용어를 가져와 유모의 노동 행위의 핵심인 '사랑'을 고립적으로 사고하여 그것이 속해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질서와 분리시키는 현상을 비판한다. 1세계(부유한 고용주 부모)가 3세계 유모의 애정을 소비하고 낭만화하면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유모가 겪고 있는 외로움, 딜레마, 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다. 혹쉴드는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정서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현상을 '부정의 injustice'의 문제로 볼 것을 제안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보살핌 노동의 가치를 올리자", "글로벌한 윤리 감각을 개발하자"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성 노동의 세계화의 비가시성"을 가시화하고, "여성을 완전한 인간으로 보는 것", 서론에 제시된 이 책의 목적이다. '글로벌한 윤리 감각'이라...어떻게 이것을 획득할 수 있을까. 저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비가시적인 정의의 영역을 가시화하고, 정의(justice)의 인식론적 지도를 바꾸는 것, 이를 통해 이른바 집단 지성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적일 것이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의 '글로벌한 윤리 감각'이란 다름 아닌 '의존'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누리는 행복, 나의 생존과 삶이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고, 타자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깨달음. 그것이야말로 정의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싶다.

부록2. 새로운 빈곤 개념: 의존은 응석이 아니다!

유아사 마코토(2009),『빈곤에 맞서다 - 누구나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위해』, 검둥소.

경제적 부국인 일본에서 다수의 인구가 넷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전전하며 머무를 곳이 없는 난민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는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한번 미끄러지면 바닥까지 추락하게 되는 '미끄럼틀 사회'로 진단한다. 아동학대, 부모 유기 혹은 살해 등의 범죄를 '마음'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접근하자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그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 따라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저자는 빈곤에 대해 '가난=경제적 결핍'이라는 통념을 깨고 사회적 지위의 부재 혹은 박탈의 문제로 접근한다. 경제학자 아마티아 센에 따르면 빈곤은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잠재 능력을 박탈당한 상태"로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부자유"이다. 저자는 '다메'라는 개념을 통해 아마티아 센의 통찰력을 확장시킨다. '다메'란 일본어로 '고여있는 물(저수지)'에서 '고여있는 무엇'으로서, 일종의 유무형의 공공재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 친족,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다메'"라고 본다.(p94) 빈곤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다메'가 모두 사라지고 박탈당한 상태라는 것이다. 즉 수중에 돈이 없더라도 인간관계, 복지 시스템 등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인간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배제시키는 '빈곤' 상태에 놓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아무도 모른다(誰も知らない, 2004)"에서 가졌던 몇 가지 의문들이 해소되었다. 영화는 각각 아버지가 다른 아이 넷을 둔 싱글 맘이 아이들을 놓아두고 사라지면서, 보호자를 잃은 아이들끼리 살아가다가 결국 비극적 상황에 이르는 모습을 담았다. 내가 가졌던 의문은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점, 아이들은 마치 섬에 조난당한 사람들처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영화는 아이들을 떠난 그 엄마에 대해 윤리적 판단을 유보했다.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싱글맘이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기란 버거웠을 것이다. 다만 내가 가졌던 의문은 왜 이 엄마의 버거움을 그 어느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었을까 하는 점, 왜 이 엄마는 아이들을 떠나기에 앞서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영화의 엄마와 아이들이 놓인 상황이 바로 '빈곤'의 핵심이며, 문제는 단지 그들이 가난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고

립되어 있었다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가 가난한 사람들의 비가시성과 고립을 초래하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여 난민 상태로 만든 것이다.

일본 사회가 '미끄럼틀 사회'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단지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 책의 핵심적 주장이다. 저자는 빈곤을 개인의 게으름 탓으로 돌리는 '자기책임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응석(어리광)으로 치부하는 일본의 사회적 분위기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자기책임론'이 빈곤 문제의 근원이라면, 상호부조와 사회적 연대를 되살려 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그 대안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풍랑이 일 때 작은 어선들을 서로 매어 전복되지 않게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모야이'의 전통을 되살리는 것.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어디에도 기댈 수 없는 난민들에게 안식처와 안전망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빈곤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록3. 가난을 벌하지 말라! 지그문트 바우만
「새로운 빈곤 – 노동, 소비주의 그리고 뉴퓨어」,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이수영 옮김 / 천지인

노동이 인간의 최고 의무이자 도덕적 품위의 선행조건이며 법과
질서를 보증하는 것이고 빈곤이라는 불행의 치료제라는 신성화는
지난날 노동집약적인 산업과 공명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은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합리화되고
인원을 감축한 자본집약적, 그리고 지식집약적 산업은 노동력을 생산성
향상의 방해물로 본다. p129.

오늘날 노동윤리는 '의존'이란 개념을 불명예로 전환시키는 도구이다.
p158

지금까지 읽은 바우만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았다. 물론 후기 산업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른바 '잉여적 존재'를 지칭하는 '쓰레기'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이 이 책에서도 반복되긴 하지만.

어쨌건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핵심에 신빈곤(the new poor) 현상이 있는 듯하다. 바우만은 근대 산업 사회의 역사적 이행 과정에서 '빈곤'의 의미가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를 이 책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읽고 나서 그동안 의심스러웠거나 궁금했던 것들, 예컨대 요즘 정치권이 돌아가는 방식, 범죄 뉴스가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됐다.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근대가 '생산자 사회'에서 '소비자 사회'로 이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을 정의하는 핵심 규범이었던 '노동윤리'가 지금은 가난을 범죄화하고 탈정치화하는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공공성을 해체하고 복지 기능을 삭제함으로써 '작은 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민영화의 필연적 결과인 빈곤을 비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소거하기 위해 규제 권력(policing power)을 키우는 '큰 정부'라는 것. 여기서 바우만이 주목하는 건 '빈곤'에 대한 내러티브, 즉 '극빈층', '가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수사학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 정부에서 유달리 '법과 질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언론에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교묘하게 계층 혐오의 언어로 둔갑하는 이유(전자팔찌, 김길태 사건을 떠올려보라), 고시원을 혐오시설로 간주하여 반대하는 주민들, 각종 사회 문제가 결국 '불법화', '범죄화'로 귀결되는 현상,...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떠올랐고, 바우만의 논의를 따라가면서 상당 부분 명료하게 정리되었다.

또한 최근 정책 이슈에서 '낯설게' 등장한 '기초소득'에 대한 논의의 지적 배경에 대해 이해하게된 것도 이 책에서 얻은 수확이다. 빈곤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기초소득이나 누진소비세가 거론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빈곤에 대한 사유방식의 변화이다. '개인의 소득 자격이 실제 소득을 벌어들이는 능력과 다를 수 있다'는 시각, 임금노동을 중시했던 노동윤리 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시각, 정책의 변화는 그러한 사유의 혁명 혹은 전환을 통해서 가능할테니까.

부록4. 한국의 가난.
김수현.손병돈.이현주(2009), 『한국의 가난 - 새로운 빈곤, 오래된 과제』, 한울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문화, 사회적 연계망이 작동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가 성장해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일자리가 없어서 가난하고, 일을 해도 가난하다. 교육은 오히려 빈곤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고, 도시 개발로 가난한 사람들이 보금자리에서 내몰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파편화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가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다.

한국 사회의 빈곤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빈곤 위험 사회'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빈곤은 단지 물질적 결핍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제와 소외의 문제라는 것, 가난을 사회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는 한, 결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메시지다.

> 결국 우리의 빈곤 대책은, 조금 비꼬아서 표현하면,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원하는 정책'에 그치고 있다. 마음의 상처를 주는 지원은 진정한 의미의 빈곤정책이 아니다.
> 복지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살피고 듣고 필요한 무언가를 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p. 291

아울러 저자들은 빈곤선 이하의 가난뿐만 아니라 빈곤선 주변에서 진입과 탈출을 반복하는 '반복 빈곤층'에 주목한다. 저자들이 제시하는 빈곤 극복 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3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 그래도 우리의 꿈을 감히 빈곤 극복이라고 정하자. 한국 사회의 놀라운 역동성이 빈곤 극복의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해봄 직하지 않은가? p. 304

빈곤 대책 프로그램 중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사회자본 형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던 영국의 '동네 재생(Neighbourhood Renewal)' 프로그램이다.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국가 정책 수준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영토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공통의 자원을 만들어내는 풀뿌리 정신과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빈곤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좋은 책이다. 책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 같아 안타깝다. 많이 읽혀져서 저자들의 문제의식이 널리 공유되면 좋겠다.

사족. 읽으면서 놀랍고도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노숙인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다. 노숙인 중 60%는 평생 가족을 형성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노숙인 중 30% 가량이 고아원 출신이고, 60% 가량이 결손가정이나 알코올 의존증 부모를 두었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빈곤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만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것 같다.

5

여성노동, 쟁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그린다!

박봉정숙 |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강의 자료는 강의 당일 추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여성노동, 희.勞.애.락 워크샵

강의참가자 모두 다함께

※ 강의 자료는 강의 당일 추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 상담전화 02-706-5050
이메일 : eq5050@womenlink.or.kr
온라인 : counsel.womenlink.or.kr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 나루 3층
☎ 대표전화 02-737-5763
e-mail : eq5050@womenlink.or.kr
홈페이지 : www.womenlink.or.kr